- **일시: 2026년 2월 2일(월) 14-17시**
- **장소: 광명시청 중회의실**

- 공동주최
  - 성공회대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 SNUAC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 연대사
  - 박승원 광명시장
  - 채수홍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 얀나이툰 NUG 한국대표부 특사
  - 소모뚜 NUG 한국대표부 사무처장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협력팀장
  - 최기영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대표
  - 김건우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공동 후원회장
  - 조희연 <공존의 뜰> 대표, 前서울시교육감
- 발표
  - **"2.1 쿠데타 5년, '봄의혁명' 진영 자기 성찰이 최선의 공세다"**
  -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 정윤서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 학교
- 토론
  - 김희숙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 묘헤인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前NUG 한국대표부 노무관
  - 찬빅재 서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 조 산 미얀마 연방 민주주의 승리 연합(MFDMC) 활동가
  - 나현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모임 공동집행위원장
  -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내란과 전란을 넘어 평화로 미얀마 - 봄의 혁명 - 5년 기념 토론회

내란과 전란을 넘어 평화로

미얀마 '봄의 혁명' 5년 기념 토론회

일 시 : **2026. 2. 2.(월) 14:00**
장 소 : **광명시청 중회의실**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
광명시민인권센터

2025년 6월, 박은홍 교수(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소장)가 태국-미얀마 국경지대 메솟을 방문했을 때 만난 시민방위군(PDF) 소속 와인레이 요원. 시민방위군 요원같은 남편(위저드씨),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만났다.

TIME TABLE

1부 : 사회 이성덕 (광명시 시민인권센터장)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분)		
14:00	14: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시민인권센터장
14:05	14:20	15	인사말씀(연대사)	박승원 광명시장 외

2부 : 사회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소장)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분)		
14:20	15:30	70	발표	
15:30	16:50	80	토론	
16:50	17:00	10	폐회 및 정리	시민인권센터장

Contents

1부

사회 : 이성덕 (광명시 시민인권센터장)

연대사

박승원(광명시장) 8

얀나이툰(NUG 한국대표부 특사) 10

소모뚜(NUG 한국대표부 사무처장) 14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의원) 18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20

김찬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협력팀장) 23

최기영(성공회대 국경없는민주주의학교 대표) 25

서정민(성공회대 국경없는민주주의학교 공동후원회장) 28

김건우(성공회대 국경없는민주주의학교 공동후원회장) 30

조희연('공존의 뜰' 대표, 前서울시교육감) 32

2부

사회 : 박은홍 (성공회대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소장)

[발표]

박은홍 (성공회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윤서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2.1. 쿠데타 5년, '봄의 혁명' 진영의 자기 성찰이 최선의 공세다" 39

[토론]

김희숙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다시 돌아가, 복사씨들과 살구씨들의 삶으로부터 혁명을 62

묘헤인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前NUG 한국대표부 노무관)
미얀마 쿠데타 5년: 구조적 원인과 현재의 정치적 교착 70

찬빅재 (서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이념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봄의 혁명 78

미얀마 연방 민주주의 승리연합(MFDMC) (발표 : 조산)
국경을 초월한 저항: 5년간의 혁명 기록 84

나현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모임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시민사회의 미얀마 연대를 돌아본다 92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국제연대를 다시 묻다: 미얀마 위기와 아세안의 책임 96

1부
연대사

사회 : 이성덕
(광명시 시민인권센터장)

미얀마 봄의 혁명 5년을 맞아
— 내란과 전란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의 연대를 다시 다짐하며

박 승 원
광명시장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얀마 봄의 혁명 5년을 맞아, 「내란과 전란을 넘어」라는 주제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의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고통과 투쟁을 기억하고 국경을 넘어 연대의 책임을 되새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시민들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무너뜨렸고, 그 이후 미얀마는 내란과 전란, 광범위한 인권침해 속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폭력과 억압 속에서도 미얀마 시민들은 자유와 존엄을 포기하지 않았고, '봄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광명시는 이러한 미얀마 시민들의 용기 있는 투쟁에 일찍부터 연대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광명시는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원도시로서, 2021년 3월 29일, 다른 회원도시들과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도 세계 시민의 인권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어 2021년 4월 3일에는 광명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투쟁을 지지하는 광명시 성명을 발표하며, 미얀마의 아픔이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연대의 실천은 광명시가 추구해 온 '인권도시'의 가치, 즉 인권은 국경을 넘어 연결되어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그 책임의 주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광명시가 이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을 단순히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쟁지역의 인권 정보를 공유하며 지금 우리가 함께 다뤄야 할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연대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내란과 전란은 결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어디서든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얀마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인권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여정에 지방정부 차원의 연대와 실천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고통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연대의 언어를 행동으로 확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얀마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우리 모두의 연대 속에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전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얀나이툰
NUG 한국대표부 특사

안녕하십니까?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함께해 주시는 한국의 여러 친구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
저는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 특사 얀나이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은, 미얀마의 봄 혁명 5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지난 5년간의 혁명의 여정을 돌아보고 교훈을 도출하며, 그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여정 동안 미얀마 국민과 함께해 준 한국의 지지와 성원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고자 함임을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봄 혁명의 5년 동안 우리는 성공과 한계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미얀마 전 국민의 단결, 청년들의 리더십, 여성들의 회복력과 역할은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호 신뢰, 협의와 조정, 그리고 단일 전략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 여전히 부족한 어려움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5주년은 성공을 자축할 뿐만 아니라 한계도 직면하고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 미얀마 내부 역량 간의 협의와 조정을 어떻게 더욱 강화할 것인가
- 국제적 동반자 국가들과의 협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 인도주의, 민주주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전략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에 중점을 두고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경험과 지지는 매우 소중합니다.
한국은 스스로 민주주의의 길을 험난하게 걸어온 국가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노력을 깊이 이해하며 지지해 왔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미얀마 문제를 계속 제기해 주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시민사회의 활발한 활동은 우리에게 희망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미래를 전망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을 하나의 전략으로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미얀마 국민 내의 단결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장기적, 체계적,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미얀마 봄 혁명 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전략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 여정에서 한국과 한국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이 미얀마 국민에게 등불이 되어 계속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미얀마 국민과 연대하며 계속 지지와 성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봄 혁명으로부터 미얀마-한국 협력의 힘이 미얀마 내 군부 독재를 근절하고 새로운 연방민주주의 국가로 함께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를 다짐하며 마치겠습니다.

혁명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မင်္ဂလာပါ

မြန်မာ့ ဒီမိုကရေစီအရေးအတွက် ရပ်တည်နေကြသော

ကိုရီးယားနိုင်ငံမှ မိတ်ဆွေများနှင့် အဖွဲ့အစည်းအသီးသီးမှ တတ်သိပညာရှင်များ၊ခင်ဗျာ

ကျနော်ကတော့ အမျိုးသားညီညွတ်ရေးအစိုးရရဲ့ ကိုရီးယား သမ္မတနိုင်ငံဆိုင်ရာ ကိုယ်စားလှယ် ရန်နိုင်ထွန်း ဖြစ်ပါတယ်။

ယနေ့ ကျွန်ုပ်တို့ ယခုလို စုစည်းတွေ့ဆုံရခြင်းမှာ မြန်မာ နွေဦးတော်လှန်ရေး (၅) နှစ်ပြည့်ကို အထိမ်းအမှတ် ပြုလုပ်ခြင်းသာမက၊ လွန်ခဲ့သော ငါးနှစ်တာကာလတလျှောက် တော်လှန်ရေး ခရီးလမ်းကို ပြန်လည်သုံးသပ်၍ သင်ခန်းစာများကို ဆွေထုတ်ခြင်း၊ ထို သင်ခန်းစာများအပေါ် အခြေခံကာ အနာဂတ်အတွက် ပူးပေါင်းမှုအားကောင်းစေမည့် ဗျူဟာများကို ရှာဖွေခြင်း ဖြစ်ပါသည်။ ထို့အပြင် ဒီခရီးလမ်းတစ်လျှောက် မြန်မာပြည်သူများနှင့် အတူ ရပ်တည်ပေးခဲ့သော ကိုရီးယားနိုင်ငံ၏ အားပေးထောက်ခံမှု ကို အလေးအနက်ထား၍ ကျေးဇူးတင် ဂုဏ်ပြုလိုပါသည်ဟု ဦးစွာ အတိအလင်း ပြောကြားလိုပါတယ်။

နွေဦးတော်လှန်ရေး ငါးနှစ်တာကာလအတွင်း ကျွန်ုပ်တို့သည် အောင်မြင်မှုများနှင့် အားနည်းချက်များကို တစ်ပြိုင်နက်တည်း တွေ့ကြုံခဲ့ရပါသည်။ မြန်မာပြည်သူတရပ်လုံး ၏ စည်းလုံးညီညွတ်မှု၊ လူငယ်များ၏ ဦးဆောင်နိုင်စွမ်း၊ အမျိုးသမီးများ၏ ခံနိုင်ရည်နှင့် အခန်းကဏ္ဍသည် အရေးပါသော အင်အားဖြစ်လာခဲ့ပါသည်။

သို့သော် အပြန်အလှန် ယုံကြည်မှု၊ ပူးပေါင်းညှိနှိုင်းမှုနှင့် ဗျူဟာတစ်ရပ်တည်းဖြင့် လုပ်ဆောင်နိုင်မှု တို့တွင် မလုံလောက်သေးသည့် အခက်အခဲများကိုလည်း သတိပြု ဆင်ခြင်မိပါသည်။

ထိုကြောင့် ယနေ့ကဲ့သို့သော (၅)နှစ်ပြည့် အခါသမယသည် အောင်မြင်မှုကို ဂုဏ်ယူရုံသာမက အားနည်းချက်များကိုလည်း ရင်ဆိုင်သုံးသပ်ရမည့် အချိန် ဖြစ်ပါသည်။ ပြန်လည် သုံးသပ်ခြင်းမှ တဆင့် ကျွန်ုပ်တို့သည်

- မြန်မာ ပြည်တွင်းအင်အားစုများအကြား ပူးပေါင်းညှိနှိုင်းမှုကို မည်သို့ ပိုမိုအားကောင်းစေမည်နည်း
- အပြည်ပြည်ဆိုင်ရာ မိတ်ဖက်နိုင်ငံများနှင့် ပူးပေါင်းမှုကို မည်သို့ ထိရောက်စေမည်နည်း
- လူသားချင်းစာနာမှု၊ ဒီမိုကရေစီနှင့် တာဝန်ယူမှုကို အခြေခံထားသည့် ရေရှည်ဗျူဟာကို မည်သို့

တည်ဆောက်မည်နည်း စသည်တို့ကို အလေးထား စဉ်းစားရမည် ဖြစ်ပါသည်။

ဤအချက်များတွင် ကိုရီးယားနိုင်ငံ၏ အတွေ့အကြုံနှင့် အားပေးထောက်ခံမှု သည် အလွန် တန်ဖိုးရှိပါသည်။ ကိုရီးယားနိုင်ငံသည် ကိုယ်တိုင် ဒီမိုကရေစီလမ်းကြောင်းကို ခက်ခဲစွာ ဖြတ်သန်း ခဲ့သည့် နိုင်ငံဖြစ်ပြီး၊ ထိုအတွေ့အကြုံကို အခြေခံကာ မြန်မာပြည်သူများ၏ ဒီမိုကရေစီကြိုးပမ်းမှုကို နားလည်မှု အပြည့်ဖြင့် ထောက်ခံလာခဲ့ပါသည်။ အပြည်ပြည်ဆိုင်ရာအဆင့်တွင် မြန်မာ့အရေးကို ဆက်လက် တင်ပြပေးခြင်း၊ လူသားချင်းစာနာမှု အကူအညီများ ပံ့ပိုးခြင်းနှင့် အရပ်ဘက် အဖွဲ့အစည်းများ၏ တက်ကြွသော လှုပ်ရှားမှုများသည် ကျွန်ုပ်တို့အတွက် မျှော်လင့်ချက်၏ အခြေခံ အုတ်မြစ်ဖြစ်ပါသည်။

အနာဂတ်ကို ရှုမြင်ရာတွင် ကျွန်ုပ်တို့အတွက် အရေးအကြီးဆုံးမှာ ပူးပေါင်းမှုကို ဗျူဟာ တစ်ရပ်အဖြစ် မြှင့်တင်ခြင်း ဖြစ်ပါသည်။ မြန်မာပြည်သူများအတွင်း စည်းလုံးညီညွတ်မှုကို ခိုင်မာ စေရုံသာမက၊ ကိုရီးယားနိုင်ငံအပါအဝင် ဒီမိုကရေစီတန်ဖိုးကို မျှဝေထားသော နိုင်ငံများနှင့် ရေရှည်၊ စနစ်တကျ၊ အပြန်အလှန်အကျိုးရှိသော ပူးပေါင်းမှု ကို တည်ဆောက်ရမည်ဖြစ်ပါသည်။

အဆုံးသတ်အနေဖြင့်

မြန်မာ နွေဦးတော်လှန်ရေး ၅ နှစ်ပြည့်အခါသမယတွင် ကျွန်ုပ်တို့သည် အတိတ်မှ သင်ခန်းစာယူ၍ အနာဂတ်ကို ဗျူဟာတကျ တည်ဆောက်သွားမည် ဟု ကတိပြုလိုပါသည်။ ထိုခရီးလမ်းတွင် ကိုရီးယားနိုင်ငံနှင့် ကိုရီးယားပြည်သူများ၏ ဆက်လက်အားပေးထောက်ခံမှုသည် မြန်မာပြည်သူများ အတွက် မီးအလင်းတစ်စင်းအဖြစ် ဆက်လက်ရှိနေမည်ဟု ယုံကြည်ပါသည်။

ဒီမိုကရေစီအတွက် ကျန်ုပ်တို့ မြန်မာပြည်သူများနှင့်အတူ စည်းလုံးညီညွတ်စွာဖြင့် ဆက်လက် အားပေး ထောက်ခံ ရပ်တည်ကြပါရန် မေတ္တာရပ်ခံရင်း နွေဦးတော်လှန်ရေးမှသည် မြန်မာ–ကိုရီးယား ပူးပေါင်းပါဝင် ဆောင်ရွက်မှုအားသည် မြန်မာနိုင်ငံ အတွင်း စစ်အာဏာရှင်စနစ် အမြစ်ပြတ်ကျဆုံးစေပြီး ဖက်ဒရယ်ဒီမိုကရေစီ နိုင်ငံတော်သစ်ဆီသို့ အတူတကွ ဆောင်ရွက်ကြပါစို့ဟု သံမိဋ္ဌာန်ချမှတ်ပြီး နိဂုံးချုပ်အပ်ပါတယ်။

အရေးတော်ပုံအောင်ရမည်။

ရန်နိုင်ထွန်း

ကိုရီးယား သမ္မတနိုင်ငံဆိုင်ရာ မြန်မာ ကိုယ်စားလှယ်

အမျိုးသားညီညွတ်ရေးအစိုးရ

미얀마 군부 선거 :
독재연장을 위한 정치적 기만극

소 모 뚜
NUG 한국대표부 사무처장

2020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한 민주 정부를 부정 선거라는 구실로 찬탈한 미얀마 군부는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잔인하게 탄압했고, 이는 전국적인 저항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최근 군부는 위기 탈출구로서 선거를 강행하고 있으나, 이는 민주주의로의 회귀가 아닌 군사 독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정치적 연극'에 불과합니다.

1. 선거 전 준비 과정과 탄압

군부는 2025년 7월, '국가안보평화위원회'를 신설하여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임시 대통령직을 맡아 선거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위기: 쿠데타 이후 5년 동안 약 360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했고, 민간인 7,700여 명이 사망했으며, 22,000명 이상이 부당하게 구금되었습니다.

무차별 공격: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민간 거주 지역에 1,000회 이상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2. 불공정한 선거 시스템과 전략

이번 선거는 치안 불안 속에서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강행되었습니다.

제한된 선거 실시: 총 330개 구역 중 65개 구역에서는 선거가 전혀 열리지 못했고, 213개 구역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실시되었습니다. 국가 전체 면적의 약 20%에서 선거가 무산되어 대표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부정선거 장치

1. 전자투표 도입: 미얀마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기를 도입했으나, 결과 조작에 대한 우려가 팽배합니다.

2. 투표율 무관 승인: 투표 인원이 아무리 적어도 선거 결과를 확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3. 무혈 입성: 경쟁 후보가 없는 지역(주로 저항 세력 점령지)에서는 군부 측 후보가 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되도록 설계했습니다.

3. 야당 배제와 정치적 탄압

군부는 NLD, SNLD 등 대중적 지지가 높은 주요 민주 진영 정당들을 강제 해산, 후보 등록을 불허하며 선거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가혹한 처벌: 선거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신규 선거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0명 이상을 투옥했습니다.

사전 투표 조작: 사전 투표의 85%가 군부 지지 정당인 연방단결발전당

(USDP)에 쏠렸으며, 패배 위기 지역에서는 투표 종료 후 도착한 사전 투표용지로 결과를 뒤집는 등 2010년 선거 당시의 부정 수법을 그대로 재연했습니다.

4. 선거일 상황 및 결과

민 아웅 흘라잉은 "국민의 승리"라고 자평했으나, 실제 투표율은 50%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강압적 동원: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제로 투표소에 동원되었습니다.

권력 세습 구조: 의석의 25%(166석)를 군부에 자동 할당하고, 나머지 의석은 USDP가 차지하게 함으로써 군부 주도의 정부 구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구 집권 계획: 민 아웅 흘라잉은 군복을 벗는 척하면서도 '군사위원회 의장'이라는 직책을 통해 군 통수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5. 국제 사회와 시민들의 반응

국제 사회: 중국과 러시아는 참관단을 보냈으나, 아세안(특히 필리핀), 유엔, 한국 등 국제 사회는 이번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시민 저항: 시민들은 '침묵 파업(Silent Strike)'을 통해 선거를 거부했습니다. 해외 거주 미얀마인들도 군부의 선거에 강력히 규탄하는 집회 거리행진들을 계속 개최했습니다.

민족통합정부(NUG)는 이러한 사기 선거를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군사적 측면에서 단일한 중앙 지휘 체계 아래 결집하여 테러 군부 집단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지도자가 참여하는 정치적 통합체를 형성하여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주의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미얀마 군부의 가짜 선거는 미얀마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향한 전쟁 범죄를 증가시키고 군부 독재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목적일 뿐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봄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민족통합정부(NUG)를 포함한 혁명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고, 부여된 혁명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미얀마의 민주 혁명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국제 사회를 포함 대한민국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회복력, 미얀마 '봄의 혁명'에서 희망을 보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미얀마 '봄의 혁명'이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얀마 시민들은 무차별적 탄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을 잃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모진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의지로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온 미얀마 시민들과 모든 민주 진영 활동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정당성을 가장한 단계적 선거를 강행하며, 민주주의의 성지로 불리던 카우무 지역구까지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폭력과 억압 속에서 치러진 불법적 선거는 미얀마의 난민과 희생자 수만 급증시켰습니다. 민주 세력을 배제하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의 절차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분쟁 감시 단체인 ACLED의 집계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이어진 내전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9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아웅산 수치 고문을 포함해 2만 2천여 명이 넘는 시민이 투옥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군부가 1차 투표를 강행했던 지난 12월 28일 하루에만 68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선거가 얼마나 잔혹한 폭력이었지 보여줍니다.

미얀마의 위기는 단지 한 국가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결의안을 채택했고, 지속적으로 민족통합정부(NUG)·시민단체들과 공식 간담회를 통해 연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얀마 민주 진영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길은 멀고 험하지만, 진실을 향한 걸음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이 '12.3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판결하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것처럼, 정의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은 반드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뒤 찾아올 평화와 민주주의는 그 무엇보다 굳건하고 온전할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저 또한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미얀마에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그날까지, 굳건한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국경없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이 응원합니다

염 태 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존경하는 미얀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내외 연대자 여러분께 깊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입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한 나라의 합법적 정부를 전복시켰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민의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동시에 미얀마 시민들이 침묵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서며 '봄의 혁명'을 시작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미얀마 시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폭력과 희생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군부의 총과 감옥 앞에서도 시민들은 연대했고, 노동자와 학생, 소수민족과 여성들이 함께 새로운 미얀마를 꿈꾸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온 모든 미얀마 시민들과 민주세력에 깊은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대제목인"내란과 전란을 넘어 평화로"는 매우 정확한 문제의식이라 생각합니다. 미얀마의 위기는 단지 한 국가의 내정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공동의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민주주의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경험해 온 나라입니다. 군사독재와 국가폭력을 넘어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우리의 역사 속에는, 지금 미얀마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투쟁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윤석열의 내란 시도와 그에 맞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K-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은 민주주의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지켜내려는 국민의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되찾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경험을 미얀마 시민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님,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와 국경없는민주주의학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그리고 광명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중에도 자리를 빛내 주신 NUG 한국대표부 얀나이툰 특사님과 소모뚜 사무처장님, 박승원 광명시장님, 채수홍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님, 성공회대학교 국경없는민주주의학교 최기영 대표님과 김건우 공동후원회장님, 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늘 힘을 보태주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 깊이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박은홍 교수님, 정윤서 학생활동가님, 김희숙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교수님, 묘헤인 전 NUG 한국대표부 노무관님, 찬빅체 박사님, 조산 MFDMC 활동가님, 그리고 나현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모임 공동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숭고한 용기와 헌신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NUG 한국대표부 관계자 여러분께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미얀마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손을 맞잡고, 내란과 전란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는 혼자가 아니다 : 미얀마와 함께하는 연대

김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협력팀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협력팀장 김찬호입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날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킨 날이었습니다. 분노한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저항을 우리는 그 시간을 '미얀마 봄의 혁명'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회는 쿠데타 직후,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와 불법 구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의 현실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특히 최근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세력을 배제한 채 선거를 강행했고, 군부와 연계된 정치 세력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야권은 해산되거나 선거 참여 자체가 봉쇄된 상황이었고,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22년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연대와 실천을 이어왔습니다. 사업회가 주최한 국제포럼에 미얀마 민주화 활동가들을 초청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한국 사회에 알렸으며, 미얀마 민주화 관련 캠페인과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민주주의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 속에서 회복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2025년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개관은 이러한 국제 연대의 노력을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념관은 한국 민주화의 역사만을 기억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세계 각지의 민주주의 투쟁과 연대하는 살아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미얀마 민주화 역시 그 중요한 일부로, 앞으로도 지속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5년 전 쿠데타의 배경을 다시 성찰하고, 내란과 전란을 넘어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화 경험이 미얀마에 하나의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억압의 시간을 견디고 연대의 가치를 학습한 한국의 시민은 함께 고민하고 손을 내밀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미얀마 시민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혼자 싸워서 지켜낼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미얀마 민주화 여정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되어 지키자

최 기 영
성공회대학교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대표

5년 전 이날, 미얀마 청년들은 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투쟁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 흐름이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의 상황은 국제사회의 관심으로부터 점점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연대에 관한 성찰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대에 우리는 놓여있는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를 일컫는 땃마도는 아웅산수지가 이끌던 NLD 등 반군부 정치세력을 배제한 가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불법적인 권력에 합헌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군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선거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를 지원하며 땃마도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 선거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SEAN은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분으로 미얀마의 인권 탄압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서방 세력은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군부 민주진영과의 연대는 군부의 그것보다 한없이 약합니다.

저명한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은 '제 3의 물결'을 통해 민주화의 요건 중 하나에 미국의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1990년대 민주화 물결의 맥락에서는 올바른 제시일지도 모르겠으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인권에 기초한 국제 연대 개념이 부재했던 국제사회에서는 서방 패권이 주창했던 민주주의가 위선적이었고 제국주의적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첨병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위선적인 민주주의 전파는 오히려 권위주의 세력에게 사상적 명분을 줄 뿐이었습니다. 중국은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를 마련하여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아시아의 권위주의 정부들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합니다. 이는 서구의 사상이 아시아의 전통적 기반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게끔 유도하고, 유교적 정치가치에서 위계적인 부분을 조작하여 독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스스로를 '국가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땃마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땃마도의 명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땃마도와 중국이 말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사이비적입니다. 불교는 자비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지진으로 쑥대밭이 된 마을에 폭격을 가하는 땃마도의 행태에선 자비를 볼 수 없습니다. 유교는 조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군부를 지원하고 반군부 세력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조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유교의 가면 아래 중국이 미얀마를 철저히 패권 행사의 장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임시정부 NUG도 연방주의에 대한 이상과 버마족 중심주의의 현실이 괴리를 일으키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얀마에서는 민주주의와 그에 대한 성찰이 절실합니다. '봄의 혁명'의 동력은 운동의 명분만으로 얻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원주의에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선 민주주의는 취약합니다. 다원성을 위해선 두 개 그 이상의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흔히 꽃에 비유됩니다. 민주화(民主化)는 민주화(民主花)이기도 합니다. 홀로 핀 꽃은 금세 시들기 마련입니다. 돌풍이 불었을 때 기댈 곳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꽃밭의 꽃은 쉽게 시들지 않고 오히려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한국은 탄핵을 경험한 후 또다시 계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홀로 섰기 때문입니다.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2024년 한국의 비상계엄은 같은 궤도에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끼리만의 민주주의론 취약합니다. 민주주의는 세계적 맥락에서 연대하여 그 취약성을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공고함은 연대의 결과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성공회대학교의 지성 신영복 교수님의 말씀을 빌려 연대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5일은 신영복 교수님이 돌아가신 지 10주기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숲이 되어 지키자.' 이제는 한국이 미얀마에게, 미얀마가 한국에게 말할 때입니다. 우리 더불어 민주주의가 되어 지키자고. 국경없는민주주의학교는 미얀마의 '봄의 혁명'이 완수되는 그 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서정민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공동후원회장

저는 목축업을 하는 경제인입니다. 자연과 소와 사람이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공간에서 일합니다. 30년이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얀마는 지난 5년전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사람이 사는 공간과 자연이 파괴되면서 지금까지 6천명이 넘는 희생자가 생겼다 하니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제 큰딸이 영국에 유학하고 있어 지난 해 영국 여행을 했습니다. 풍족한 나라로 정치, 경제적으로 많이 앞서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80년전까지만해도 미얀마를 식민지배한 제국주의 국가였고 지금의 미얀마내 민족갈등의 기원도 영국 식민지 시기에 서 찾을 수 있다는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접했는데 참으로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제국주의 영국은 언제 다른 나라를 침략했었냐는 듯이 평화롭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처럼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에 더 공감하게 되는 우리가 아닌가 합니다.
세계시민으로서 남다른 공감능력을 갖고 불공평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또 미얀마 청년들과 연대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 학교 구성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그리고 버마

김건우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공동후원회장

어느 누구도 하나의 독립된 섬은 아니요,
그 스스로가 온전한 것은 아니어라.
사람은 그 누구나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한 부분.
그 한 조각의 땅덩어리를 파도가 밀려와 씻어가면,
씻긴 만큼 유럽의 땅이 줄어듦은 곧 갑(岬)이 줄어듦이니라.
그대 친구의, 그대 자신의 농토가 줄어듦이니라.
어떤 친구의 죽음도 나 자신의 소모려니,
그건 나도 또한 인류의 일부이기에.
그러니 묻지 말지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느냐고.
바로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니.

— 존던(『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중에서)

존던은 자신의 시에서 우리 인류는 독립된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친구의 죽음도 나 자신의 소모이므로, 우리가 듣고 있는 조종(弔鐘) 소리는 곧 당신을 위해 울리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이 고도화되었다고 자부하는 현대 시민사회에서 최근 수 년 간 여러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근본주의 신권정치체제는 최근 이란의 경제악화와 사회문제에 대한 저항, 시민운동에 대해 수천, 수만명을 학살하는 사건을 보여주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의해 2025년 12월 3일 45년 만의 비상계엄령을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버마)는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로 존속하다가 제2차세계 대전 중 일본의 점령, 1945년 일본패망, 결국 1947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얻어냈지만, 1962년 내원 군사정권의 쿠데타, 1988년 신군부 쿠데타 등 민주주의자들과 군부독재의 반목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미얀마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군부독재와 반군연합이 내전을 치르고 있으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미얀마, 이란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의 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인류 문명 역사의 반복이며 이에 대한 시민의 저항 또한 인류 문명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조종(弔鐘) 소리는 곧 우리의 조종(弔鐘) 소리이며, 그들의 땅덩어리가 독재자의 손에 씻겨가면 그것은 우리의 땅덩어리가 독재자의 손에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얀마 민주주의 승리를 위해 여러분들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 후손에 대한 지원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란과 전란을 넘어,
'차이 속의 연대'에 굳건히 선 민주와 평화로

조 희 연
<공존의 뜰> 대표
前서울시 교육감

오늘 우리는 '미얀마 봄의 혁명 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앞에 서 있습니다.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로 시작된 시민불복종운동은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과 공포를 정치의 수단으로 삼아온 역사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근본적 거부였습니다. 그 거부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채, 혹독한 희생과 고통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 분들의 대부분은 '5.18 광주'를 직간접적으로 접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광주는 한때 "고립된 도시"였고, "폭력에 맞선 무모한 저항"으로 왜곡되었으며, 오랫동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침묵의 시간이 강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광주는 패배한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얀마의 봄의 혁명 역시 지금은 고립과 분열, 피로와 좌절 속에 놓여 있는 듯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당대에는 미완의 투쟁으로, 후대에는 공동의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영웅적 찬사를 넘어 성찰의 공간을 직시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단지 미얀마 민주화운동 진영의 영웅적인 투쟁에 찬사를 보내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성찰과 헌신, 희생의 정신을 전 과정에서 견지하면서, 한국 민주화의 과정보다 더 높고 성숙한 길을 가기를 바라는 기조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어쩌면 단일한 민족, 단일한 이념의 운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민주주의 투쟁은 단일한 민족이나 단일한 이념의 운동이 아니라, 다수의 민족과 지역, 세대, 정치적 경로가 교차하는 연합운동입니다. 그만큼 이질성을 내장하고 있으며, 그 이질성은 때로 연대의 균열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뉴 미얀마(New Myanmar)'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경험 역시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라, 노동자와 학생, 시민과 종교인, 이름 없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불완전한 연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열이 없느냐가 아니라, 그 균열을 폭력이 아니라 민주적 성찰과 책임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저항공동체 전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마인드로 다룰 수 있느냐였습니다.

저항의 과정은 미래국가의 연습과정

미얀마의 봄의 혁명은—저의 제한된 지식에 기초하면--지금 군부라는 외부의 폭력뿐 아니라, 연합 내부의 민주주의라는 더 어려운 과제와도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투쟁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 미래 국가의 윤리와 질서를 미리 연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얀마의 동지들이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차이를 넘어선 연대의 정신',

자기성찰과 헌신, 희생의 마인드 역시 지니기를 바랍니다. '차이 속의 연대'에 굳건히 선 민주와 평화의 길을 개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민주화 과정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주 이후에도 우리는 수없이 흔들렸고, 타협했고, 때로는 후퇴했습니다. 저는 이를 '장기 민주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 투쟁 역시 무수한 균열과 문제를 안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얀마의 저항운동에 기대하는 그러한 성숙한 미덕과 가치가 있었다면, 한국 민주화의 경로는 더 찬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1987년 6월 민주화투쟁 이후 쟁취한 '자유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변혁적 지향을 지닌 많은 단체들은 언제나 이념의 선명성을 둘러싼 내홍을 겪었습니다. 장기 민주화 시대의 전기와 달리, 후기인 지금은 전두환과 같은 분명한 '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지구적 극우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민주주가 퇴행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반독재 민주화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되었을 때에는—미얀마의 친구들에게 낙담의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집권 이후의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저항의 과정에서, 그리고 저항 이후의 단계에서도, 미얀마가 한국보다 더 높은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감히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미래국가의 윤리와 질서를 상상하면서 그것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민주주의는 총보다 느리지만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민주주의가 지켜온 한 가지 신념과 원칙을 미얀마의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총알보다 느리지만, 결국 더 오래

간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선언합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투쟁은 결코 외로운 투쟁이 아닙니다. 광주를 기억하는 한국 시민사회는, 그리고 아시아의 민주와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은, 미얀마가 내란과 전란을 넘어 민주해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봄은 한 해에 한 번 오지만, 혁명의 봄은 때로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 봄은 반드시 옵니다. 미얀마의 봄이 연대의 인내를 통과해 자유와 존엄의 계절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 민주화에 함께해 온 한 사람의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굳건한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부

발표와 토론

사회 :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발표]

"2.1 쿠데타 5년, '봄의 혁명' 진영 자기 성찰이 최선의 공세다."

박은홍(성공회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윤서(성공회대학교 국경없는민주주의학교)

2.1 쿠데타 5년, '봄의 혁명' 진영의 자기 성찰이 최선의 공세다

박 은 홍 성공회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 윤 서 성공회대학교 국경없는 민주주의 학교

1. 끝이 보이지 않는 지난한 투쟁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5년이 되었다. 지난 5년 동안 미얀마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쿠데타 군의 잔인함은 끝이 보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9월과 10월 사이 약 1,180만 명(전체 인구의 22%)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했으며, 이 중 100만 명은 긴급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2025년 6월과 2026년 5월 사이에 5세 미만 아동 41만명과 임산부 및 수유부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직면했다. 2023년 3월에 발행된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의'네 개의 단절(four cuts)전략'이 미얀마 내부 인권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의 '네 개'란 식량 공급, 자금, 인력 충원, 정보를 지칭했다. 쿠데타 군부는 시민불복종운동(CDM)을 두고 "잡초를 뿌리 뽑겠다"고 폭언을 내뱉은 바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反군부 진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난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군사정부가 전 국토의 60%가량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연방군의 충주가 되어야 할 임시정부 민족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과 소수민족무장조직(EAO), 여타 지역방위군(LDF) 등의 무장력이 미얀마군을 위협하고 나아가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쿠데타 이후 출범한 NUG는 정치군인의 통치와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2008년 헌법 폐기를 선언했다. 또 쿠데타를 주도한 민아웅흘라잉 휘하의 군부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로부터 양민들을 보호하는 방어 전쟁을 선언하였다. 결국 反군부민주 진영이 드러내놓고 평화적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고 민간인 살상을 무자비하게 자행하는 군부와 맞서기 위해 비평화적 수단의 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군부의 감시를 뚫고 청년들의 항전이 이어졌다. 많은 청년들이 집을 떠나 PDF에 가세해 군과 전투를 벌였다[1]. 사가잉, 마구에, 바고 등지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격전지이다. 특히 오랜 기간 비교적 조용했던 사가잉, 마구에 같은 지역(division)들은 PDF가 중심이 된 무장 단체들이 군부에 저항함에 따라 분쟁지대로 바뀌었다. 이제 이 세 지역은 임시정부인 NUG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마을 단위로 자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NUG 출범 이전에 이미 활동을 시작한 PDF는 NUG를 유일한 정부로 승인했고, 역으로 NUG는 PDF를 NUG 정부군으로 승인했다. 따라서 PDF와 NUG는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에 놓였다. PDF의 활약이 큰 지역의 확대가 곧 NUG의 영향력의 확대를 의미하게 되었다. 물론 PDF와 소수민족무장조직(EAO)으로 불리던 소수민족혁명조직(ERO)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카렌(Karen), 까친(Kachin), 친(Chin)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PDF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NUG로서는 미래의 연방군이 될 PDF의 확대와 소수민족무장조직(EAO)와의 관계 강화를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

---

[1] PDF가 무기를 확보하게 되는 경로는 대략 네 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국내외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무기를 구입하는 경로, 두 번째로 직접 무기를 제조하는 경로, 세 번째로 소수민족들로부터 무기를 지원받는 경로, 마지막으로 미얀마 군부를 공습해 무기를 취득하는 경로가 있다.

그러나 쿠데타를 비난하고 민주 진영의 정당성을 옹호한 국제사회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NUG를 공식 인정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얀마를 회원국으로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합기구인 아세안(ASEAN)도 미얀마 사태가 발생하자 2021년 4월 쿠데타의 주역인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로 불러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항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아세안은 요구사항 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 민아웅 흘라잉 군총사령관을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지 않는 것 이외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미얀마 군정 외교장관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는 참여할 수 없었지만, 태국은 2023년 7월 16일과 17일에 방콕에서 개최된 메콩-갠지스강 협력 회의와 벵골만 다분야 기술경제협력 기구 외교장관 특별회의에 그를 초청했다. 회의 중 미얀마 군정 외교장관 딴스웨는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대표들과 별도의 회담을 가졌다. 반면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얀마 사태를 두고 아세안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아세안 회원 각국이 미얀마 문제에 각자 비공식적 관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입장을 취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말레이시아는 내정불간섭이라는 아세안의 전통적 규범을 넘어 미얀마 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해왔다. 물론 아세안 내에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이른바 대륙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의 방어논리인 내정불간섭을 옹호해왔다. 아세안의 11번째 회원국이 된 동티모르의 샤나나 구스마오 총리는 민주국가 동티모르는 아세안 가입 이전 미얀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아세안 회원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그는 2023년 7월 1일에 열린 총리 취임식에 임시정부 NUG 외교부장관 진마아웅을 초청했다.

반면 쿠데타 초기부터 군부를 지지한 중국과 러시아는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2023년 10월 27일에 있었던 <세형제동맹>의 군부에 대한 공격도 한때 큰 성과를 보였지만 중국의 개입으로 동력이 떨어졌다. <세형제동맹>의 일원이면서 라카인 지역을 근거지로 전쟁을 벌인 아라칸군(AA)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그나마 군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아웅산수지가 이끌던 NLD 등 반군부 정치세력을 배제한 전혀 정당성이 없는 총선도 지원해 주고 있다. 미얀마 사태를 두고 수수방관하는 미국 등 서방에 비해 중국의 미얀마 개입은 매우 적극적이고 미얀마의 평화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2].

2. 포퓰리스트 아웅산 수지는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나[3]?

국민 대다수는 1기 NLD 정부의 실적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공약으로 내건 경제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소수민족과의 화해는 답보상태를, 언론자유는 후퇴한 면이 있었다. 국제사회도 대량의 로힝야 난민을 촉발시킨 미얀마 군에 대한 아웅산 수지의 대응에 실망하자 인권과 민주주의의 영웅이라고 하는 그녀의 평가는 크게 손상을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군의 이권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감 쿠데타를 통해 민주화를 역행시켜도 좋다는 것은

[2] M. A. Hossain, “China helping Myanmar’s junta regain its lost grip”, *Asia Times*. 2025년 10월 29일.

[3] 이 장은 山口健介『ミャンマー「民主化」を 問い直す ポピュリズムを越えて』NHK出版. 2022. 72~79쪽에 의지하였다.

아니었기에 미얀마 국민은 수지 등의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을 일으켰고, 서방국가들을 비롯한 국제 사회도 이를 지지했다[4].

2012년에 정계 입문한 직후, 아웅산 수지는 많은 미얀마 국민의 의사에 반하게 국적법 개정을 통해 로힝야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당시 많은 미얀마 국민이 가진 미얀마인 정체성 이미지와 거리를 두고 로힝야를 국민으로서 인정해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정권을 잡고 난 이후 NLD는 태도를 바꾸어 로힝야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무원들에게 세상의 이목이 로힝야 문제에 쏠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2020년 총선에서는 그때까지 로힝야에게도 인정되고 있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에 이르렀다. 로힝야 위기를 거치며 이슬람 배제의 기세를 높여가던 불교 내셔널리즘 속에서 이 고조되는 가운데, 집권세력인 아웅산 수지와 NLD가 본래 가지고 있던 포퓰리즘의 측면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배제적 포퓰리즘의 전형적 통치방식 – 언론 제한, 차별적 법치주의, 비판자 억압 – 이 활개쳤기 때문에 반다원성이 강해졌다[5].

불교 내셔널리즘과 '미얀마인' 이미지가 다시 상상된 2017년,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의 기본 원칙에는 화해나 헌법 개정과 더불어 법치(rule of law)가 기본 원칙으로 명기되어 있었다. 아웅산 수지와 NLD는 군정 시대에도 NLD 정권 이후에도 법치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주장해왔다. 법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공정한 사법절차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포퓰리스트 아웅산 수지의 NLD 집권기에 법치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4] 永井浩.『ミャンマー「春の革命」問われる』社会評論社. 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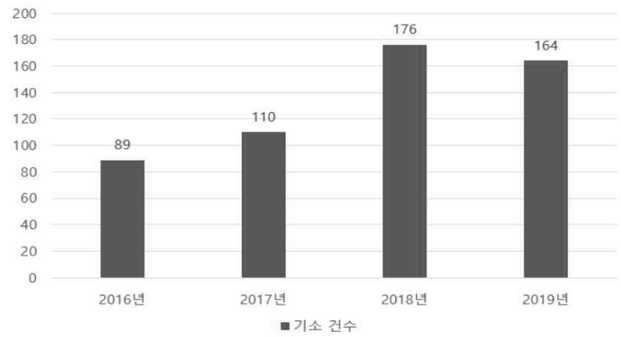
[5] 山口健介『ミャンマー「民主化」を 問い直す ポピュリズムを越えて 』NHK出版. 2022. 85～86쪽

① 미디어 통제

로힝야 위기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이 시기에, 로이터 통신 기자 두 명이 기밀 서류의 불법 소지 혐의로 국가기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그 서류는 2명이 로힝야 박해를 취재하던 중에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 측의 함정이었다는 것이 훗날 판명되었다. 이 체포 사건은 곧바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게 되어 비난이 쏟아졌지만, 미얀마 당국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두 기자는 금고형 7년의 판결을 받고, 그 후 사면되었다. 이 사건으로 미얀마의 보도 규제 현실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미얀마 당국의 보도 규제는 강도를 더해갔다.

라카인주에서의 군에 의한 소탕 작전을 비판한 국내 미디어의 편집자나 영화감독이 국가기밀법 위반이나 비합법결사법 위반 등으로 체포된 것이 그 예이다. 억압은 전통 예능의 영역까지 번져, 2019년에는 사회를 시 낭독으로 풍자하는 극단 탕잣의 단원 5명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심지어 극단의 단원 25명은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억압은 인터넷 미디어에도 미쳤다. 라카인주와 친주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단계적으로 스마트폰에 한정되었고, 2019년 6월 이후에는 이 접속이 차단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지의 치안이 악화하고 있어, 무장 세력이 인터넷을 매개로 공격하거나 유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치"라고 해명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 두 개 주를 합친 인구의 7분의 1 정도 – 에게 영향이 미쳤다. 한 저명한 시민 활동가가 당국의 차단 조치를 비난하는 "전쟁범죄를 감추기 위한 인터넷 차단"이라는 현수막을 다리에 내건 후, 그는 평화적 집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도표>미얀마 당국에 의한 표현·언론 활동을 둘러싼 기소 건수



출처) Athan Myanmar. 山口健介 『ミャンマー 「民主化」を 問い直す: ポピュリズムを越えて 』NHK出版. 2022. 74쪽에서 재인용

위 <도표>는 아탄미얀마[6]가 제공한 2016년 NLD 정권 발족 후 표현이나 언론 활동과 관련된 기소 건수이다. 2016년 89건, 2017년 110건, 로힝야 위기 이후인 2018년은 176건으로 증가했고 2019년은 164건으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애초에 아웅산 수지와 NLD는 정권 발족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통제해왔다. 민간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다. 로힝야 위기로 언론 규제가 한층 엄격해지자, 시민들의 실망은 더욱 깊어졌다.

② 차별적인 법치주의

6 다큐멘터리 촬영감독들을 포함 미얀마 출신 기자들이 함께 활동하는 NGO이다. 표현의 자유를 키워드로 해서 태국-미얀마 국경지역 메솟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탄미얀마에 따르면 NLD 정권 출범 후 2016년부터 2019년 4년간 적용된 법령으로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단속하는 전기통신법(229건), 시위 및 집회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평화적 집회·시위 행진법(91건), 이외에 국가기밀법이나 비합법결사법 등이 있다. 종래 이러한 법들은 민정 이양 이전의 군정 하에서 NLD 측의 민주 활동가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NLD 정권 발족 후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 법률의 개정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집권 이후 NLD 정권은 법률 개정에 소극적이었으며, 전기통신법의 적용 조건을 오히려 엄격히 규정해 군사정권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7].

더 큰 문제는 국가기밀법이나 비합법결사법이 적용된 점이다. 이들은 영국 식민지기에 제정된 것이며, 국가기밀법은 정부가 보유하는 기밀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어떤 정보에 대해 국가기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이다.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기밀 지정하여 은폐하는 것으로도 이어져 독직 등 부패를 조장할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로이터 통신의 기자가 이 국가기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기자가 경찰관으로부터 받아든 자료가 당국이 규정한 '국가기밀 정보'였기 때문이다.

비합법결사법은 특정 단체와의 연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어떤 단체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연관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했다. 이 법은 또한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였다. 실제로 국내 언론 이라와디(The Irrawaddy) 기자가 동부 샨주에서 소수민족 무장조직의 마약 단속 캠페인을 취재하자, 해당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7 Athan Myanma(2020). A Chance to Fix in Time: Analysi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Four Years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2016-2020): 山口健介(2022)에서 재인용.

받았다. 만약 소수민족 무장조직을 취재하는 행위가 비합법 특정 단체와의 연관으로 간주된다면, 언론 매체가 취재할 수 있는 범위는 극단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영국 식민지 시절, 식민지 정부는 반대자를 억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법 체계를 필요로 했다. 1923년 제정된 국가기밀법과 1908년 제정된 비합법결사법이 이에 해당하였다. 무엇을 국가기밀 혹은 비합법결사로 규정하는지가 매우 불명확하여 권력자에게 유리한 법 해석이 가능했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이는 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차별적 법치주의(discriminatory legalism)의 한 측면이다. 같은 정보를 접하고도, 같은 단체와 접촉하고도 어떤 사람은 위법으로, 다른 사람은 합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위법성이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면 정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선택적·차별적으로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억압적 통치를 수행하던 식민지 시대의 법 체계가 차별적 성격을 띠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법치를 주창한 아웅산수지의 NLD 정권이 해당 법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③ 시민사회의 억압

아탄에 따르면 NLD 정권 발족 후인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고소당한 사람들은 1051명인데, 그 절반 495명이 일반 시민이었으며, NGO 등 활동가들도 326명이 이르렀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 로힝야 송환 반대 시위에 참가한 아탄 지도자가 평화적 집회·시위 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위 시위 관련 기소된 인물 중에는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시민단체 <젊은이들에 의한 하나의 세계>(One Young World)' 일원으로 SNS상 토크 프로그램 사회를 맡고 있던 저명한 여성도 있었다.

또한 인권 감시 단체 <버마정치범지원협회>의 공동 발기인도 군정 시기 수감된 경험이 있었지만, NLD 정권 하에서도 법정에 섰다[8].

당시 NLD 홍보 담당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으며 NGO 역할도 인정하고 있다. (중략) 안전보장이나 민족 간 찬반이 갈리는 주제와 관련된 활동이 아니면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독립성 없는 NGO이고, 배후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품게 하는 경우는 별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NLD가 표면적으로는 NGO나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NLD에 비우호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엄격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로힝야 위기를 거치며 특히 젊은 세대의 활동가들로부터 지금까지 못 본 척 묵인해 온 로힝야 주민들에 대해 동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NLD 정부의 억압성은 로힝야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소수민족 카렌족이 다수를 점하는 카인주에서 건국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의 동상이 세워지려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운동에 관여한 활동가가 체포·기소되어 6개월 징역형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소수민족 몬족이 다수를 점하는 몬주에서는 NLD가 '몰라만 차운존 다리'를 '아웅산 장군 다리'로 개명하려 했을 때 수천 명의 지역 주민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NLD는 이 대규모 운동을 무시하고 개명을 추진해 국회 승인을 받아냈다.

2017년 로힝야 위기를 거치며 반이슬람적 불교 내셔널리즘이 미얀마 전역으로 확산되었을 때,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족을 불문하고 반로힝야

8 Athan Myanmar(2020)

여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또한 버마인을 중심으로 한 국민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소수민족 사이에서 여전히 뿌리 깊은 반대가 존재했다. 아웅산 장군은 버마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아웅산 동상이나 그의 이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많은 소수민족에게 불교 내셔널리즘을 수용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버마족 중심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2020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NLD에 의한 사회적 억압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소수민족에 대한 버마족 중심주의의 강압이라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3. 문제는 '혁명' 내부에도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폭압에 맞서 민족의 차이를 넘어 단일대오를 이룬 적이 없다. 이념과 민족 간 갈등의 틈을 비집고 군부는 정치 개입의 명분을 만들어 왔다.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 정부조차도 반(反)다원적인 포퓰리즘에 의존하면서 소수민족과의 화해를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했다. 로힝야를 향한 군부의 박해에 대해서도 아웅산 수지와 1988년 8월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들, 이른바 88세대는 눈을 감았다. 심지어 일부 88세대는 로힝야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2·1 쿠데타 이후 반군부 진영이 방어 전쟁을 선언하면서 무장력을 갖춘 소수민족 무장조직(EAO)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까렌민족동맹(KNU), 까렌민족진보당(KNPP), 까친독립기구(KIA), 친민족전선(CNF) 등이 NUG에 가담하였다. NUG는 소수민족과의 보다 폭넓은 연대를 위해 획기적으로 로힝야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NUG 산하 PDF와 소수민족 무장조직(EAO) 간의 관계도 확대되었다. 미얀마 군을 몰아붙이는 데 성공한 아라칸군(AA)의 툰 미야 나잉 장군과 까친독립군(KIA)의 군마오 장군 등의 역할도 부각되었다.

그러나 반군부 전선 내 연대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순탄치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부 사가잉 지역에서 군과의 전투에서 공로를 세운 버마민족혁명군(BNRA)과 그 지도자 보나, 그리고 NUG 사이의 갈등설이 제기되어 오던 차에, NUG가 BNRA에 대한 공격 명령을 비밀리에 내렸다는 사실이 최근 독립 언론인의 폭로를 통해 공개되었다. 또한 이미 2024년 9월 26일자 BBC 뉴스에서는 NUG 산하 국민치안기구(카파카) 조직원에 의한 살인 행위와 여성 폭력 등의 문제가 폭로된 바 있다. 자국민간인을 향해 대량 살상을 자행하는 데모사이드(democide) 국면에서 반군부 진영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특히 남성 중심의 미얀마 사회에서 여성 인권 상황은 열악했다. 봄의 혁명에 많은 여성이 참여했고, 이러한 힘이 남성 중심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혁명 진영 내부에서도 많은 한계가 존재함이 드러났다.

독립 이후 미얀마에선 군부의 폭압에 맞서 민족의 차이를 넘어 단일대오를 이룬 적이 없다. 이념과 민족 간 갈등의 틈을 비집고 군부가 정치 개입의 명분을 만들었다.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정부조차도 反다원적인 포퓰리즘에 의존하면서 소수민족과의 화해를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했다. 로힝야를 향한 군부의 박해에 대해서 아웅산수지와 1988년 8월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들, 이른바 88세대는 눈을 감았다. 심지어 일부 88세대는 로힝야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2.1 쿠데타 이후 반군부진영이 방어 전쟁을 선언하면서 무장력을 갖춘 소수민족무장조직(EAO)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까렌민족동맹(KNU), 까렌민족진보정당(KNPP), 까친독립기구(KIA), 친민족전선(CNF) 등이 NUG에 가담하였다. NUG는 소수민족과의 보다 폭넓은 연대를 위해 획기적으로

로힝야에 대한 지지도 보냈다. NUG 산하 PDF와 소수민족무장조직(EAO)과의 관계도 확대되었다. 미얀마 군을 몰아붙이는데 성공한 아라칸군(AA)의 뚠미레나잉 장군과 까친독립군(AA)의 관머 장군 등의 역할도 부각되었다.

현재 NUG 산하에는 시민방위군(PDF)과 국민방위대(파카파), 국민행정조직(파아파), 국민치안조직(파라파)를 포괄하는 파톤룬이란 조직이 있다. 그런데 미얀마 중부 사가잉의 경우 파톤룬이 과도한 세금과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가 BBC방송에 전해진 적도 있었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와 친드윈 강 수로를 따라 설치된 파톤룬 검문소들에서 특히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경로를 이용하는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친드윈강 수로에는 몬와에서 홈말린, 칸띠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미얀마 군 검문소가 약 10곳, NUG 산하 파톤룬 조직의 검문소가 60곳 이상 설치되어 있다고 증언했다. 군 검문소당 약 50만 짯에서 100만 짯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고, 파톤룬 검문소에는 한 곳당 약 10만 짯에서 최대 150만 짯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몬와에서 홈말린까지 물자를 운송해야 하는 또 다른 운송업자는 친드윈 강을 따라 세워진 검문소들 때문에 배를 몰아 지그재그로 강을 건너며 운항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또 강변에 설치된 파톤룬 검문소를 그냥 지나치면 군인이 총을 쏴서 정지 신호를 보내는데 발사한 탄환 수에 따라 탄약 비용과 세금을 함께 물게 된다고도 했다. 만달레이 시위 지도자인 테자산 전문의는 이런 현장 상황에 대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며, 제때 바로잡지 못할 경우 주민들이 혁명 자체에 실망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예안마빈 타운십에 기반한 방위 조직의 지도자도 BBC에 파톤룬이 주민들에게 가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했다. NUG 내무부장관 우륀꼬랏은 NUG 산하 공무원들과 파톤룬 조직들이 저지른 범죄, 일반 형사 범죄, 성범죄 등에 대해 중앙민원접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타운십에서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중앙민원접수위원회나 각 부처 민원접수위원회에 증거와 함께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원회가 신고자와 직접 연락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가 충분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전문의 테자산은 많은 주민들이 혁명 세력의 잘못이나 부당 행위에 대해 책임자에게 문제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파톤룬에 아들을 잃고 NUG에 단계적으로 신고해 왔던 우포우는, 신고 대상이 된 파톤룬 지도자가 가족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어, 가족 모두가 마을을 떠나 도망친 지 이미 1년이 넘었다고 밝혔다[9].

까렌민족연합(KNU)과 까렌민족진보당(KNPP)의 민족통합자문위원회(NUCC) 탈퇴도 좋은 신호는 아니다. 이들은 NUCC의 우선순위와 활동이 현장의 실상과 점점 더 동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탈퇴 이유로 들었다. 이로써 NUCC에는 무장 조직으로는 전버마학생민주전선(ABSDF)만이 남게 되었다.

4. 봄의 혁명은 여전히 희망적이다

2025년 11월 17일, 사가잉 연방의회(SFUH)는 2020-21년 사가잉 지역 의회에서 사가잉 타운십 1번 선거구 NLD 의원이었던 소우를 사가잉 연방정부(federal unit) 과도정부 총리로 선출했다. 이어 제6차 정기회의에서는 2021년 2월 1일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바 있는 다른 두 명의 NLD 의원인 민트트웨와 퓨퓨윈을 각각 SFUH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시민 연대 기구 사가잉 포럼 연맹의 쵸와이표 회장은 이것이

9 BBC News Burmese(2024)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상향식 과정임을 강조하며 모두의 응원을 당부했다. SFUH 제6차 정기회의에는 만윈카잉탄 총리를 포함한 NUG 관리들, 토쵸흘라잉을 포함한 민족통합자문위원회(NUCC) 위원들이 참석했다. 사가잉 지방정부는 LDF와 PDF가 충돌할 시 중립적 분쟁조정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3년 8월 1일 공표된 NUCC와 NUG의 공동 성명서는 독재 정권의 종식과 연방 민주주의 헌장 제1조에 명시된 공동 비전, 가치, 지침 원칙, 기본 정책 및 로드맵에 따른 '연방 민주주의 연합' 건설을 공동의 정치적 목표로 천명했다. 미얀마 '봄의 혁명'의 최종 목표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실질적인 체제 변화, 즉 새로운 연방 민주주의 연합 수립을 향한 연방 민주주의 제도의 완전하고 엄격한 이행에 있음을 선언했다. 또한 군사 쿠데타 관행과 군부의 정치 개입도 영구적으로 종식하고, 미래의 연방 민주주의 연합이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를 책임지며, 민간 정부의 통제 하에 무조건적으로, 예외 없이 다른 소수민족들과 함께하는 연방 군대를 설립하자는 약속을 확인했다. 또한 이들은 2021년 2월 1일 불법 군사 쿠데타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급적, 종족적 차이를 뛰어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자행된 인권 침해, 전쟁 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대량 학살 및 기타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transitional justice mechanisms)'을 의무화하고 실행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

미얀마 전문가 베르틸 린트너(Bertil Lintner)는 독립 직후부터 미얀마의 역사는 중앙 정치와 소수민족 거주 지역 모두에서 분열로 점철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분열은 군부 정치 개입의 명분이 되었고, 미얀마를 60년 넘는 암흑기에 가두었다. 그는 '미얀마 사회에 연대투쟁(united front)이란 신기루다'(The Mirage of the 'United Front' in Myanmar)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10].

[10] Bertil Lintner, "The Mirage of the 'United Front' in Myanmar", *The Irrawaddy*, 2023년 6월 29일

5. 자기 성찰이 최선의 공세다

연방주의(federalism)라는 공존의 정치는 자율(autonomy)에 기초한 대화민주주의(dialogic democracies)에 다름 아니다. 대화는 대등함을 전제로 한 인지적, 감정적 소통을 위한 개방성(opening out),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기(counterfactuality), 타협적 권위(negotiated authority)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11]. 무엇보다도 독단을 피하기 위한 성찰이 긴요하다.

연방주의의 승리를 위한 자기 성찰(self-reflexivity)의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미얀마 군부인 땃마도 포퓰리즘(T-포퓰리즘)을 상대하기 위해 버마족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NLD 포퓰리즘(N-포퓰리즘)이 있었다. 이제 반군부진영은 N-포퓰리즘을 온전히 넘어서야 공존의 정치와 연방 민주주의에 다가갈 수 있다.

② 2.1 쿠데타 이후 전개된 전국적 시민불복종운동(CDM)에서 여성들과 "다름을 받아들이고 힘을 합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성소수자들의 역할이 돋보였다. 반군부진영 지도부는 여성들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폭행을 일삼는 혁명 내 조직원에 대해서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얀마 군부 땃마도 만이 아니라 NUG를 비롯한 반군부 진영 역시 기로에 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11] Anthony Giddens. *Beyond Left and Right: The Future of Radical Politic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118-119.

③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 '봄의 혁명' 진영의 소프트파워 역시 중요하다. 과도한 '혁명세'는 민심 이반을 눈덩이처럼 불릴 수 있다.

④ NUG의 인적 쇄신, 거버넌스 쇄신이 필요하다. 출범한 지 5년이 되어가는 NUG에 대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⑤ 반군부진영 내 정치적 다름을 NUG는 최대한 포용해야 한다. 그것이 연방주의(federalism)의 시작이다. 이때의 '다름'은 민족만이 아니라 이념, 방법, 종교, 세대 등의 차이이기도 하다. 특히 여러 소수민족무장조직들(EAO)과 여러 지역방위군(LDF)에 대한 관대함이 필요하다.

⑥ '봄의 혁명'은 내부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주의로 위장한 모든 前근대적 후원(patron)-수혜(client) 관계를 혁파해야 한다. 아웅산 수지 前 국가고문을 친근한 표현으로 '아메이'(엄마)로 부르기도 했지만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현상은 아니다. 각 민족이 안고 있는 전통적인 지배-복종 문화, 위계질서를 정당화하는 관습법은 청산되어야 한다[12].

⑦ 한때 한국의 대 미얀마 외교를 두고 NATO(No Action, Talk Only) 외교라고 부른 적이 있다. 이젠 NUG 외교를 두고 NATO 외교로 보는 시선이 있기도 하다. NUG 외교를 미얀마 영토 안 각 주 민족 간 신뢰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적극외교다. 국제사회는 NUG가 소수민족들로부터 제대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NUG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⑧ 중국은 일관되게 쿠데타 군부를 지지해 왔으며, 이번 총선 추진을 배후에서 후원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과거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도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던 중국이 땃마도의 가짜 선거를 지원하면서 배신의 외교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쿠데타를 주도한 민아웅흘라잉 군 총사령관으로부터 중국의 지지를 철회시킬 수 있도록, 친교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 트랙(two-track) 외교가 필요하다. 라카인 지역을 해방구로 만들어낸 아라칸군(AA)이 지역 내 중국 자본을 향해 투자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실용 외교를 편 것은 주목할 만한 모범 사례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정치력, 경제력 확장을 위해 유교적 가치의 역내화 등 소프트파워 구축에 주력하는 실리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 정책 방향이 반군부 진영쪽으로 기울도록 미얀마 군부를 군사력으로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13].

⑨ 모든 민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연방 국가(united states), 뉴미얀마(New Myanmar) 건설을 위해서 다양한 외국 사례 연구와 제도화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치열한 정치 토론이 필요하다. 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협의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로서 실험되어온 민족 간 갈등완화 메커니즘으로서의 동맹(Alliance),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 통합정부(Unity Government)도 그 한 사례가 될 것이다.

---

12 山口健介『ミャンマー「民主化」を 問い直す ポピュリズムを越えて 』NHK出版. 2022. 112~113.

13 동남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평가는 다음 논문들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Meesuwan, S., & Eunhong Park. (2025). "Soft Power at the Crossroads: Confucianism and Perception of China in Southeast Asia." TRaNS: Trans -Regional and -National Studies of Southeast Asia. 2025. 1~28; Sanyarat Meesuwan, Eunhong Park. (2025). "The association between delegative democratic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China in Thailand from the Asian Barometer Survey." Social Sciences & Humanities Open. Volume 12. 1~10.

군사력이 위축된 미얀마 군부 땃마도까지 참여시키는 저강도 연방주의(low-intensity federalism)에서 고강도 연방주의(high-intensity federalism)로 진화하는 점진주의(gradualism)를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⑩ 내란과 전란을 넘어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이 곧 정의라는 현실주의를 피할 수 없다. 이때의 힘은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등을 모두 포괄하며, 특히 내전 상황에서는 군사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지휘 계통(COC)의 확립이 필요하다. 미래 연방군의 주축이 될 PDF, LDF, ERO 간의 긴밀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민주 진영 측 혁명군의 약점이다. 이처럼 군사적 협력이 난항을 겪는 결정적 이유는 모든 민주 진영을 아우르는 정치 협의체이자 연방민주주의의 골격을 세워야 할 NUCC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NUCC에서 아웅산 수치의 NLD가 탈퇴한 것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까렌민족연합(KNU), 까레니민족진보당(KNPP)과 같은 주요 무장조직은 물론 연방의회대표자회의(CRPH)도 NUCC 참여를 중단하였다. 강력한 정치력의 뒷받침 없이는 군사력의 실질적인 확대와 통합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⑪ 통합 차원에서 부상병들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다. 특히 태국-미얀마 국경지대 메솟에 피신해 있는 부상병들이 보호받고 있는 의료센터에 대한 지원책이 긴급하게 요청된다. NUG 차원에서 보훈(veteran affairs)을 위한 치밀한 설계와 집행이 있어야 한다.

6. 공존의 정치는 '연금술사의 돌'인가?

"억압의 비용이 포용의 비용을 앞지를수록 경쟁적 체제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라는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Dahl)의 공리(axiom)에 비추어 볼 때, 지난 12월 28일과 1월 11일, 25일 총 3회에 걸쳐 실시된 군부 주도의 총선은 이 공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내전 상황에서 군부의 억압 비용이 포용 비용을 분명히 능가하고 있음에도, 경쟁적 체제가 아닌 실질적 야당 세력을 배제한 채 총선을 강행한 군부는 합리적 계산을 무시할 정도로 위기에 몰려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이는 통제된 경쟁 구조를 형성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미얀마 군부의 민낯을 보여준다.

군부가 주도한 이번 총선은 중국의 노골적인 지원과 암묵적 승인 속에서 진행되었다. 총선을 통해 군부의 상황 관리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중국의 판단은 머지않아 오판임이 드러날 것이다. 총선의 실패는 곧 군부의 정당성 확보 실패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군부는 '동의'가 아닌 '공포'에 기반한 정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자국민을 대량 학살하는 데모사이드(democide)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가 아닌, 군사력이라는 비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NUG가 방어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군부 진영 관할 지역에서는 '자유의 정도'가 쟁점이라면, 군부가 통치하는 공간은 자유가 완전히 배재된 채 청년들을 강제 징집해 대는 '악몽의 현장' 그 자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UG를 비롯한 반군부 진영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뼈아픈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찰의 범위는 지난 5년을 넘어 아웅산 수지의 민간 정부 시기, 더 멀리는 우누 민간 정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만 소수민족 진영이 왜

NUG에 흔쾌히 손을 내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신뢰 구축을 위한 해답도 얻을 수 있다. 국내외의 큰 기대를 받았던 아웅산 수지의 NLD 정부가 "기존 군사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라는 비판을 왜 받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2020년 11월 NLD의 총선 승리는 그들이 압도적으로 잘해서가 아니라, "군부보다는 낫다"라고 본 국민들의 차선책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2020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정성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군부의 총선 연기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라카인주 같은 변방 지역에서와 같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을 무시하고 이를 강행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반군부 연대체인 NUCC에서 NLD가 이탈하고, 정당으로서는 신사회민주당(DPNS)만이 남아 있는 초라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에서 공존의 정치와 연방 민주주의가 신기루(mirage)에 그치지 않으려면, 배타적 포퓰리즘을 넘어 민족과 종교의 경계를 허무는 숙의와 포용의 정신이 있는 포퓰리즘을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미얀마에 연방 민주주의의 세상을 완성해 줄 연금술사의 돌(Philosopher's Stone)'이 현실화되는 그날을 상상해 본다.

[토론]

김희숙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다시 돌아가, 복사씨들과 살구씨들의 삶으로부터 혁명을

묘헤인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前NUG 한국대표부 노무관)
미얀마 쿠데타 5년: 구조적 원인과 현재의 정치적 교착

찬빅재 (서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이념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봄의 혁명

미얀마 연방 민주주의 승리연합(MFDMC) (발표 : 조산)
국경을 초월한 저항: 5년간의 혁명 기록

나현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모임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시민사회의 미얀마 연대를 돌아본다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국제연대를 다시 묻다: 미얀마 위기와 아세안의 책임

다시 돌아가,
복사씨들과 살구씨들의 삶으로부터 혁명을

김 희 숙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에서 미얀마 현지 상황을 알리기 위해 발행한 첫 번째 이슈페이퍼는 “까야주로부터 온 편지”(2021년 6월 7일 발행)이다. 까야주는 공식적으로 135개로 알려진 미얀마의 수많은 소수민족 집단 가운데 한국에선 가장 잘 알려진 카렌족(미얀마어로는 ‘까잉’)의 하위 종족으로, ‘붉은 카렌’이라는 뜻의 ‘카렌니’ 족이 다수를 이루는 미얀마의 소수민족 주(state) 중 하나로, 2021년 쿠데타가 발발한 초기부터 시민들의 맹렬한 저항으로 군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미얀마에서도 가장 작은 주로, 쿠데타 전 수십 년 동안 이미 악명 높은 4 Cuts(교전 지역에서의 식량, 정보, 자금, 병력 충원 차단) 작전을 비롯한 미얀마군의 체계적인 폭력에 시달려야 했지만, 쿠데타 이후엔 짧은 기간에 주민의 3분의 1일이 넘는 10만여 명이 피난민이 되었을 정도로 이 지역이 입은 피해는 다른 지역보다 한층 심각했다.

이슈페이퍼를 발행할 당시엔 이미 군부가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글에는 현지에서 소식을 전해 온 미얀마 시민의 이름조차 밝힐 수 없었다. 대신 필자는,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처지에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의 의지와 헌신이야말로 이후 ‘봄 혁명’으로 알려진 반군부 저항운동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에 이름을 넣는 자리에 기억할 만한 가명을 적어 넣었다.

‘복사씨’—김수영 시인의 시 ‘사랑의 변주곡’에서 언제고 때가 되면 싹을 틔워 낼 변혁의 맹아를 간직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 비유된 복사씨와 살구씨, 곶감씨에서의 바로 그 복사씨였다. 50년 넘게 지속된 군부 독재 시기를 견뎌온 미얀마 시민들의 ‘단단한 고요함’은 1988년의 민주화운동이나 2007년 사프란 혁명 등으로 분출되었고, 2021년 쿠데타 이후 전국적인 시민불복종운동으로 다시금 터져 나왔다. 시인이 “복사씨와 살구씨가 한번은 이렇게 사랑에 미쳐 날뛸 날이 올 거다!”라는 표현을 실감케 하는 광경이었다.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군대에 맞서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행동은 흡사 사랑에 미친 자들처럼 강렬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10년가량의 개혁이 약속한 미래를 한순간 짓밟아 버린 군대에 맞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수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거리에서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진압된 이후로도 시민들의 저항은 일상에서, 그리고 정글에서의 무장 투쟁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계속 이어졌다. 쿠데타가 발발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얀마에서 저항이 지속될 수 있었던 동력이 국내외에서 자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복사씨들과 살구씨들의 지지와 지원이었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쿠데타가 발발한 지 3년을 채워가던 시점에 샨주 북부에서 ‘1027 작전’으로 가시화된 저항운동 진영의 반격은, 그 오랜 시민들의 고통도 머지않아 끝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하지만 소수민족무장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룩한 군사적 성취가 봄 혁명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도약대가 되리라는 전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투명해졌다. ‘1027 작전’을 주도한 형제동맹(3-Brotherhood Alliance)이 점령지를 둘러싸고 벌인 이권 다툼, 반군부 저항운동에 합류한 광범위한 집단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지휘력을 발휘할 것이 기대되었던 NUG의 역량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일련의 사건들과 연대 단체들의 이탈 조짐 등, 내부에서의 균열이 가시화되는 형국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외적으로 NUG가 미얀마를 대표하는 정부로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직면하게 된 여러 곤경과 더불어, 이른바 Big 'P'의 정치(Politics)에서의 실패라 할 만하다. 그런데 봄 혁명 진영이 직면한 더 큰 위기는 봄 혁명의 진정한 기반이자 동력인 시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 통치의 종식이라는 대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군사적 대응에 자원과 역량을 쏟아붓고, 이를 통해 탈환한 몇 개 지역에서 민간 행정을 복원하는 등 소기의 성취 외에 NUG를 비롯한 혁명 세력이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인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 물론 애초에 단기간에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고, 무력으로 국가 기능과 자원을 독점한 군대에 맞서 지금까지 이어온 투쟁은 혁명의 지도부만이 아닌, 국민의 의지와 신념,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기는 하나 해를 거듭할수록 미얀마의 봄 혁명을 떠받쳐 온 거대한 뿌리가 빠른 속도로 부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는 뚜렷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군부와의 주도권 싸움이나 국제사회에서 미얀마를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받기 위한 싸움에서의 좌절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저항운동 진영이 그 싸움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소홀했던 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Big 'P'의 정치에 억압된 small 'p'의 정치를 되살리는 혁명

2021년의 미얀마는 쿠데타에 따른 혼란에 더하여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기에, 팬데믹 사태가 완화된 이후 재개된 나의 첫 국외 현지 조사는 미얀마가 아닌 태국의 매솟(Mae Sot)에서 이루어졌다.

미얀마 먀와디(Myawaddy) 타운십과 국경을 접한 태국의 매솟은 1988년의 민주화운동과 1990년의 총선 이후 군사정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저항운동 진영의 정치적 거점이자, 태국 국민보다 더 많은 수십만 명의 미얀마 국민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지역이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소수민족 거주 지역, 특히 카렌민족연합(KNU)의 거버넌스 거점인 꺼잉주(Kayin/Karen State)가 1988년 이후와 사실상 동일한 정치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매솟이 다시 한번 중요한 저항의 배후지로 부상했다. 이곳에서 나는 미얀마에서 반군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를 피해 도망쳐 온 시민/난민들과 활동가, NUG 직원, 그리고 미얀마 출신 이주민들을 만나고, 수십 년 동안 이들을 지원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시설 등을 방문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한 매솟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곤경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저항운동의 거점이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배후지다운 역동이 느껴지는 장소였다. 사실 그 역동이란 매솟에 접해 있는 미얀마 쪽 영토가 저항 세력의 활동 거점이었던 만큼 군부의 공격이 집중된 지역이었고,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더 집중적으로 수많은 피난민이 몰려드는 곳이었기에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던 데 따른 것이었지만, 그와 같이 자원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장소가 건재하는 한 미얀마의 봄 혁명도 희망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1027 작전'으로 전장의 판세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던 만큼 그 기대감은 더욱 컸던 듯하다.

하지만 2024년 7월부터 미얀마로 향하여 양곤에서 현지 조사를 수행하면서 느낀 분위기는 매솟에서와는 사뭇 달랐다. 쿠데타 초기 시민불복종운동에 합류하여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던 노동자들은 쿠데타 이후 지속된 경제 위기로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반토막 가치도 못하는 임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전력난에 따른 잦은 정전과 내전 장기화에 따른 물류 장애, 군부의 수입 제한 조치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실업률도 높아졌다. 전장에서의 패배로 병력 보충이 절실해진 군부가 2024년부터 징집령을 시행하면서 농촌으로 역이주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청년 인구도 급증했다. 그에 따라 한때는 노동력 부족 현상도 나타나, 공장주들이 자발적으로 2018년 이래 동결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응책을 내놓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군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202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급에 1,000짯의 수당을 얹어 "정부 보조금"(government subsidy)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 그렇다 해도 노동자들의 일급은 총 7,800짯(최저임금 4,800+3,000), 최근의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 5천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쿠데타 이후 군부가 노조 활동을 탄압함에 따라 작업장에서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 사례도 속출하는 상황이지만, 노동자들은 이에 대응하지 못한 채 위기 상황으로 한층 강화된 억압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근래 몇 년간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중국 윈난성 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미얀마에서 받는 임금만으로는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사업장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없이 브로커가 제시한 고액 임금 조건만을 보고 중국으로 향한 노동자들이 사실상 노예노동에 가까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이 겪는 위험은, 단지 중국에 도착해서 겪는 어려움만이 아니다. 국경 관문에 이르기까지 군부뿐 아니라 소수민족무장단체와 PDF 등 저항운동 쪽 병력 양측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중국 정부가 국경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적게는 몇 주에서부터 많게는 수개월 동안 브로커들이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며 체재 비용으로 하루하루

빚만 쌓아가는 상황에 직면한다. 어렵사리 국경을 넘어 공장에 취업해도 수개월 동안 급여에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노동자들이 기대했던 고액 임금은 그렇게 공제되는 비용과, 또한 미얀마에서라면 초과근로 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할 장시간의 근로가 강제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사실상 기숙사와 공장에 감금된 상태에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식사를 제공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못해 미얀마로 돌아오려 해도 빚을 모두 청산하고 불법적 지위에 따른 협박과 착취까지 감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급기야 공장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기거하는 기숙사에서는 죽은 노동자들의 혼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괴담까지 등장할 정도로 국경지대의 중국 산업단지에 취업한 미얀마 노동자들의 처지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대다수가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불법 취업이기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도 없을뿐더러,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조차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유사한 피해 사례는 앞으로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의 복사씨들과 살구씨들이 겪는 이러한 곤경들은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작은 정치들(small 'p'의 정치)이 설 자리를 잃게 됨에 따라 심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일상의 작은 정치에서, 아주 작은 성취나마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까지 잃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정치에서의 승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은 군부가 물러나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는' 일인가? NUG를 비롯한 저항운동 진영이, 그리고 공식적으로 NUG를 미얀마를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국가로서 한국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치러야 하는 작은 정치들을 지원할 방도는 없는 것일까?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있다. 일례로, 2023년부터 미얀마 군부가 해외에 취업해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일정 비율(25%)의 소득을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경로를 통해 의무적으로 송금하도록 강제한 조치에 대해 NUG 한국대표부가 이중과세임을 지적하여 국내에서 공론화한 예를 들 수 있다. 한국은 2002년 미얀마와 이중과세방지협정(DATT)을 체결한 국가로서, 한국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므로 미얀마에서는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미얀마 군부가 기존의 조세법에서 외국에서 버는 급여를 면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해외 거주자의 소득에 과세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한 NUG의 문제 제기를 인용하여 국내에서도 언론보도가 있었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이를 지적하여 정부 차원의 조사와 조치를 촉구하는 등 공론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 외에 현재까지도 정부 차원의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엔이 군부와 NUG 어느 쪽도 공식적으로 미얀마를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쿠데타 이후 군부가 개정한 법이 아닌 이전의 법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함이 온당하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군부가 여권 발급 권한을 무기로 세금 납부를 강제하는 상황을 묵인함으로써 고국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 시민의 의지를 좌절시키고 있다. 정부 인정에 관한 큰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국제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는 어느 정부에 속하느냐와 관계없이 시민의 몫으로서 보장받음이 마땅하다.

앞서 소개한 미얀마 현지 및 중국 공장에 취업해 있는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미얀마의 대다수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쿠데타 이후의 미얀마 상황을 일상의 정치가 가동할 수 없는 장이라는 전제 아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시도해 보았을 법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군부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으면서 미얀마 시민을 돕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령 어느 정부도 상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ODA를 중단하는 대신 다자기구에 대한 지원만 이어가는 상황인데, 군부와 손을 잡지 않으면서 미얀마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경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갈 필요가 있다. 정부를 경유하는 지원이 아닌, 미얀마 시민사회를 직접적으로 혹은 우리 시민사회를 통해 지원하는 것도 현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만한 방도다. 사실 우리는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시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경로는 이미 차단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미얀마에 가보면 많지는 않아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시민사회단체나 개인 기부자들이 미얀마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접촉이 더욱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든 NUG나 외부에서 미얀마를 지원하고자 하는 어느 누가 되었건, 미얀마 시민들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경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되다시피 한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도 빠라히따(parahita) 자선 의료 단체들과 같은 풀뿌리 조직들이 근근이나마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이어가고 있다. 군부의 탄압과 자금 부족으로 활동이 대폭 축소된 노동운동단체들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으로나마 권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악몽 같은 현실 속에서 극심한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들을 치유하고 작은 기회라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전장이 되어버린 일상의 작은 정치들에서 승리함으로써 시민들은 앞으로 더 나아갈 기술과 맷집을 키우게 될 것이다.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들을 마련해 가는 일이 5주년을 맞은 봄 혁명의 과제가 되길 바란다.

미얀마 쿠데타 5년 :
구조적 원인과 현재의 정치적 교착

묘 헤 인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쿠데타의 구조적 원인

선출된 문민정부를 전복하고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지 정확히 5년이 되었다. 그동안 다수의 국제 보고서와 정치 분석은 2021년 쿠데타가 군부 스스로 제정한 2008년 헌법의 절차와 권한 규정조차 위반한 행위였음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군부가 쿠데타의 명분으로 제시한 '선거 부정' 문제 역시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만 조사·판단 권한이 부여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쿠데타의 법적 정당성은 처음부터 성립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의 원인을 민 아웅 흘라잉 개인의 권력욕이나 대통령직에 대한 야망으로만 설명하는 접근은 중요한 분석적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해석은 왜 군부가 그 시점에 쿠데타라는 고위험 선택을 감행했는지, 그리고 왜 이후에도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채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쿠데타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부 내부의 권력 분화, 그리고 2008년 헌법 체제와 선거제도 설계 과정에서 누적된 제도적 실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8년 헌법과 '외형적 민주주의'의 설계

군부 주도로 제정된 2008년 헌법은 민간 통치로의 실질적 권력 이양이나 민주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을 목표로 한 문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 헌법은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형적 민주주의' 틀 속에서 군부의 정치적·경제적 특권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적 장치였다. 군부는 의회 의석의 25%를 비선출 방식으로 확보하고, 핵심 안보 부처를 직접 통제하며, 헌법 개정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민간정부 하에서도 결정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군부권력을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완결된 장치라기보다는, 선거 결과와 정치 역학에 따라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한 안전장치'였다. 특히 선거제도 선택과 그 정치적 효과에 대한 군부의 오판은, 이 헌법 체제가 장기적으로 군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내포하고 있었다.

군부 내부의 분화: 개혁파와 강경파

2010년 총선 이후 출범한 테인 세인(Thein Sein) 정부는 군부 내부가 단일한 이해관계 집단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테인 세인은 전직 군 장성이었지만, 국제 제재 완화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제한적이나마 정치 개방과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정치범 석방, 언론 통제 완화, 아웅 산 수치 및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정치 참여 허용은 이러한 개혁 노선의 상징적 조치였다.

특히 2012년 보궐선거에서 NLD의 참여와 압승을 허용한 결정은 군부 내 개혁파가 일정 수준의 선거 경쟁을 통한 민간 정치로의 복귀를 감수해야 할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은 군부 내 강경파에게는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신호로 인식되었다. 2015년 총선 이후, 군부 강경파가 NLD에 대한 권력 이양을 거부하라는 압력을 가했으나 이를 테인 세인이 거부했다는 사실은, 군부 내부에서 이미 정치적 노선 갈등이 심화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선거제도에 대한 오판과 '권위주의 학습 실패'

이 지점에서 Dukalskis & Raymond(2017)의 연구는 중요한 보조적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선거제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세력의 학습 실패(failure of authoritarian learning)'를 경험했다고 지적한다. 즉, 군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적 선택이 무엇인지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부는 2010년 선거법 제정 당시 승자독식(FPTP)를 채택했는데, 이는 야당이 압도적으로 강한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친군부 정당에 치명적으로 불리한 제도였다. 만약 비례대표제(PR)를 도입했다면, 군부는 제한된 지지 기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FPTP를 유지한 이유는 두 가지 오판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서로 다른 선거제도가 의석 배분에 어떤 기계적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둘째, 장기간의 권위주의 통치로 인해 실제 대중적 지지도를 과대평가했다는 점이다. 연구가 지적하듯, 군부는 1990년 총선과 2012년 보궐선거에서 이미 참패를 경험했음에도, 2015년 총선에서도 자신들에게 최소한의 승산이 있을 것이라 오판했다.

제도적 실패에서 쿠데타로

2015년과 2020년 총선에서의 연속적인 참패는 군부에게 중대한 구조적 위기를 의미했다. 2008년 헌법이 보장한 비민주적 권한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문민정부가 압도적 대중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군부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쿠데타는 단순한 권력욕의 산물이 아니라, 군부가 스스로 설계한 제도적 틀 안에서조차 권력을 재생산하는 데 실패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쿠데타는 개인의 야망이라기보다 제도적 오판의 수정 시도였으며, 선거라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폭력을 통해 정치 질서를 재설정하려는 선택이었다. 이는 군부 내 강경파가 개혁파의 점진적 전환 전략을 폐기하고, 제도 외적 수단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미얀마 군부는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유혈 폭력과 강경 진압만으로 쿠데타에 대한 저항을 분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한편 ISP-Myanmar의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 국토의 약 38%가 시민방위군(PDF)과 소수민족 무장조직(Ethnic Armed Organizations, EAOs)의 통제 하에 놓여 있으며, 이는 국가 주권이 단일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분열된 주권(fragmented sovereignty) 상태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군부는 역사상 유례없이 두 개의 지역 군사사령부를 상실하는 패배를 경험했으나, 이러한 군사적 성과를 제도화된 성과(institutionalized gains)로 전환하는 데에는 저항 세력 역시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한쪽도 상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투(Battle) 수준의 충돌만이 지속되고 전쟁(War)을 종결지을 수 없는 교착 상태(stalemate)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자들의 분석뿐 아니라, 과거 전국휴전협정(NCA)에 서명한 7개 소수민족 무장조직의 조정자(coordinator)를 역임했던 인물의 평가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동시에 군부가 강제 징병, 저항 세력이 우위를 점했던 드론(drones)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공중전력(airpower)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등 전략적 적응력(strategic adaptability)을 일정 부분 회복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1027 작전(Operation 1027) 이후 상실했던 라시오(Lashio)와 일부 지역을, 직접적인 군사 작전이 아닌 중국의 중재라는 외부 권력(external power)의 압력을 활용해 재확보한 사례는 이러한 적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25년에 들어 군부는 지속적인 불안정 속에서도 선거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는 선거제도를 변경하려는 군부의 의도와도 맞물려 있으며, 특히 상·원 및 주·지역 의회에서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PR)를 도입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2025년 이후의 상황은, 테인 세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0년 이후와 같이 개혁과 정치적 완화가 본격화되던 시기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 독재자 탄 슈웨(Than Shwe)는 2008년 헌법 하에서 군부-USDP 공동 통치라는 '제도화된 권위주의(institutionalized authoritarianism)'를 정착시켰으나, 쿠데타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은 이 모델을 해체하고 개인화된 권위주의(personalized authoritarianism) 체제를 구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 헌법적 권위주의 모델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단기적 전개 경로로 가장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는, 헌정 질서나 군·민 합작 통치(hybrid civil-military governance)의 복원이 아니라, 군 통수권의 개인화를 통해 민 아웅 흘라잉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권력 집중은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ssions)의 강화, 내부 지휘 규정, 군 관련 법률 체계의 재편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2008년 헌법의 정신이나 조항과 명백히 충돌하더라도 개의치 않는 방식이다. 한때 권력 분점과 국제적 정당성을 위한 외피로 기능했던 헌법은, 이제는 민간 동의가 아니라 군부 조직 내부 통제가 정권 생존의 핵심이 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소모품이 되고 있다.

2008년 헌법에서 군총사령관(Commander-in-Chief)은 의회 의석의 25%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며, 군과 경찰을 직접 통제하고, 땃마도(Tatmadaw)는 제도적 자율성(Institutional autonomy)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총사령관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직에 오르는 것은, 군에 대한 직접 통제력을 상실할 위험을 동반한다. 따라서 민 아웅 흘라잉은 총사령관직에 머무르기보다는, 대통령이자 군사위원회 의장(chairman of military commission)의 지위를 통해 군을 통제하는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군 관련 법률은 상대적으로 쉽게 개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략은 제도적으로도 실행 가능하다.

이러한 전략은 전형적인 쿠데타 방지 논리(coup-proofing logic)를 반영한다. 즉, 승진, 징계, 조달, 작전 지휘에 대한 권한을 중앙집중화함으로써 엘리트 이탈을 차단하고 충성도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력 집중은 본질적으로 내향적(inward-looking)이다. 이는 단기적 정권 안전을 확보하는 대신, 장기적 제도 역량을 희생시키는 전략적 역설(strategic paradox)을 초래한다.

전략적 역설: 통제는 강화되지만 통치는 약화된다
(The Strategic Paradox: Control without Governability)

군사 권력의 개인화는 구조적 모순을 낳는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 엘리트 도전의 즉각적 위험은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효과적인 통치와 반란진압작전(counter insurgency)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적 기반을 잠식한다. 충성 중심의 승진 체계는 작전 능력을 약화시키고, 과도하게 중앙집중화된 지휘 구조는 현장 적응력을 저해하며, 장교단 내부의 감시와 불신은 적극성 대신 위험 회피를 낳는다.

그 결과 땃마도는 더 순종적이지만 덜 유능한 조직, 즉 정점에서는 안전하지만 주변부에서는 취약한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한다. 이는 영토 통제, 민간 행정, 유연한 지휘가 필수적인 분절된 분쟁 환경(fragmented conflict environment)에서 특히 치명적이다. 개인화된 통치는 질서를 회복하기보다는 군의 과도한 부담(overstretch)을 심화시키고, 영토 상실을 가속화하며, 주권 분열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편 과거 NLD가 부재하던 시기에, 전직 군부 엘리트였던 테인 세인 대통령과 슈웨 만(Shwe Mann) 하원의장 간의 권력 투쟁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현재 역시 지배 엘리트 내부에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 아웅 흘라잉을 계승할 차기 군총사령관이 민 아웅 흘라잉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야망이 크다면, 이러한 권력의 경쟁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USDP(연방단결발전당) 출신의 전직 인사들은 여전히 현역 군 간부들보다 '항상 더 시니어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군과 USDP는, 군부를 기반으로 한 지배 엘리트의 권력 유지라는 공동 목표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축과 권력 배분을 둘러싼 구조적 모순(structural contradiction)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민 아웅 흘라잉의 권력 공고화는 하나의 종착점이라기보다, 상이한 정치적 미래를 구조적으로 규정하는 조건(structuring condition)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권력의 개인화가 심화될 경우, 미얀마는 장기화된 권위주의 통치, 분열된 주권 그리고 통치 불능 상태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자기강화적 교착(stalemate)이 결합된 최악의 균형 상태에 고착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고위 장성들이 '개인 권력의 유지'보다 2008년 헌법의 제도적 생존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재조정에 나설 경우, 엘리트 분열, 강압 능력의 약화, 또는 외부 환경의 변화 등을 통해 제한적인 정치적 개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NUG와 일부 EAOs를 포함한 병렬적 권력 주체들이 지속을 제도적 레버리지(institutional leverage)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핵심 쟁점은 즉각적인 승패가 아니라, 미래의 정치적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POS)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있다.

NUG에게 POS가 중요한 이유는, 정당성만으로는 정치적 변화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명확히 해주기 때문이다. 틸리-타로우(Tilly-Tarrow)의 관점에서 정치적 기회는 공식적인 선거나 협상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엘리트 균열, 억압 역량의 약화, 국제 환경의 재편, 제도적 붕괴 등 정치적 행위의 가능 범위를 변화시키는 조건들을 포함한다. 강한 억압과 영토 분절 하에서 활동하는 병렬 정부로서 NUG에게 POS는 단순한 이론 개념이 아니라 전략적 기획 도구이다. 이는 도덕적 정당성과 전장 속 지속성이 언제, 어디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이념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봄의 혁명

찬 빅 재
서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I. 서론

혁명에서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은 정치학과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부 연구는 기존 정권이나 지도자의 붕괴를 혁명의 성공으로 정의하는 반면, 다른 연구들은 혁명 이후 혁명 세력이 지향하는 정치제도와 통치 질서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는지를 보다 핵심적인 성공 기준으로 제시한다(Skocpol, 1979; Goldstone, 2014). 이러한 성공 개념의 차이는 혁명이 어떠한 변화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기존 문헌은 혁명적 변화를 점진적 변화 (gradually change)와 급진적 변화 (radical change) 로 구분해 왔다(Tilly, 1993). 급진적 변화는 단기간 내 정권 붕괴를 달성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혁명 이후 안정적인 제도와 통치 구조가 부재할 경우 정치적 불안정이나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Skocpol, 1979). 반면 점진적 변화를 통해 정치제도와 경제 구조, 국가 운영 방식이 단계적으로 재편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국가가 정책을 집행하고 사회적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즉 국가역량(state capacity)이 강조된다(Migdal, 1988; Fukuyama, 2011).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글은 2021년 이후 전개된 미얀마의 '봄의 혁명'을 단순한 정권 붕괴의 관점이 아니라 변화의 경로와 국가역량이라는 기준에서 검토함으로써, 해당 혁명이 어떠한 의미에서 성공 혹은 한계를 지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념적 변화와 점진적 혁명 경로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혁명의 성공은 단기적인 정권 붕괴 여부가 아니라 변화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치 질서를 지탱할 수 있는 국가역량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얀마 봄의 혁명은 기존 체제를 급진적으로 붕괴시키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이념과 통치 방식의 변화를 사회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경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점진적 변화가 이념적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1. 연방주의에 대한 이념적 지지의 확대

연방주의에 대한 지지의 확대는 미얀마 봄의 혁명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이념적 변화 중 하나이다. 미얀마는 독립 당시부터 연방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출발하였으나, 군부는 이를 국가 분열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특히 1962년 네윈(Ne Win)에 의한 군사 쿠데타는 연방국가 수립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적 사건이었으며, 당시 총리 우 누(U Nu)와 소수민족 지도자들이 진행 중이던 연방 세미나(Federal Seminar)는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후 군부는 연방주의가 국가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연방주의'라는 개념은 2010년 이전까지 공식 정치 담론에서 거의 사용되지 못했다 (Lian, 2014).

그러나 2011년 이후 시작된 전국휴전협정(NCA) 평화 과정에서는 연방제도 수립 문제가 소수민족 무장세력뿐만 아니라 군부와의 협상 의제로 공식화되었다. 비록 당시에는 연방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에는 연방주의가 민주주의와 결합된 새로운 국가 건설의 핵심 원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Aung Kaung Myat, Roman David, Holiday, 2003;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21). 대규모 시위와 행진에서 '연방민주주의'(federal democracy)를 요구하는 구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은 (Aung Kaung Myat, Roman David, Holiday, 2003), 단순한 정권 반대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념적 합의의 확대는 급진적 정권 붕괴보다는 점진적 변화의 특징을 지니며, 향후 제도 구축을 정당화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국가역량 형성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자치적 통치의 확산 (국가역량의 사회적 축적 과정)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자치적 통치(self-governance)의 확산은 점진적 변화 경로가 실제 통치 역량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쿠데타 이전에도 일부 오지 지역에서는 국가가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아 교사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제한적 자치 사례가 존재하였으나, 이는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하였다. 반면 2021년 이후에는 군부의 통치 역량이 급격히 약화되고 국민들의 저항이 지속되면서, 교육, 보건, 행정,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체계적인 자치 통치 구조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친(Chin)주에서는 친란 정부 (Chinland Government)가 설립되어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Zo Tum Hmung, 2024). 유사한 형태의 자치 정부는 카친, 카렌, 아라칸 지역과 사가잉(Sagaing)주 등에서도

확인된다(Wei Chu, Saw Jonathan, Kyaw Lynn, 2024, Progressive News, 2022),. 이러한 자치적 통치 경험은 국가 붕괴 이후의 무질서를 의미하기보다는, 사회 내부에서 통치 기능이 학습되고 축적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즉각적인 중앙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는 급진적 혁명 모델과 달리, 통치 경험을 단계적으로 쌓아가며 국가역량을 형성해 나가는 점진적 변화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자립적 혁명과 내부 동원의 지속성 (점진적 변화의 조건)

미얀마 봄의 혁명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외부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 혁명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혁명은 외부 강대국이나 이념적 동맹국의 지원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 왔다 (Kalyvas, 2006). 쿠바 혁명이나 베트남 전쟁 사례에서 보듯이, 외부 지원은 단기간 내 급진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Wested, 2005). 그러나 미얀마의 경우, 혁명 세력에 의해 수립된 국민통합정부(NUG)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국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군사적·재정적 지원 역시 제한적이다 (The Diplomat, 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국민들은 약 70년 이상 권력을 장악해 온 군부에 맞서 5년 가까이 저항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외부 자원에 의존한 급진적 혁명과 달리, 사회 내부의 동원 능력과 조직 역량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립적 혁명은 단기적인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 내부의 결속과 통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점진적 변화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III. 결론

본 글은 혁명 성공에 대한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미얀마 봄의 혁명을 변화의 경로와 국가역량이라는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얀마 봄의 혁명은

아직 정권 붕괴나 안정적인 제도화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연방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확대, 자치적 통치 경험의 축적, 그리고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동원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점진적 변화 경로를 따라 국가역량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혁명의 성공을 단기적 결과가 아닌 장기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하며, 미얀마 사례는 급진적 붕괴보다 점진적 변화가 혁명 이후 정치 질서의 안정성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경험적 사례로 볼 수 있다.

References

Andrew Nachemson. 2025. “Myanmar’s National Unity Government Isn’t a Unity Government.” *The Diplomat*, June 10. Accessed January 24, 2026. https://thediplomat.com/2025/06/myanmars-national-unity-government-isnt-a-unity-government/.[thediplomat]

Aung Kaung Myat, Roman David, and Ian Holliday. 2023. “Two Concepts of Federalism in Myanmar: How the 2021 Military Coup Reshaped Political Discourse and Opposition Institutions.” *Publius* 53(2): 278–300.

Fukuyama, Francis. 2011.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From Prehuman Times to the French Revolu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Goldstone, Jack A. 2014. *Revolution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ian, H. Sakhong. 2014. *Ending Ethnic Armed Conflict in Burma.* Chiang Mai: Burma Centre for Ethnic Studies.themimu+1

Migdal, Joel S. 1988. *Strong Societies and Weak States: State-Society Relations and State Capabilities in the Third World.*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kocpol, Theda. 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illy, Charles. 1993. *European Revolutions, 1492–1992.* Oxford: Blackwell.

Zo Tum Hmung and John Indergaard. 2024. “Chinland Council Established in Myanmar.” *Stimson Center*, January 10. Accessed January 24, 2026. https://www.stimson.org/2024/chinland-council-established-in-myanmar/.[bcfausa]

Independent Research Network, and Progressive Voice. 2023. *Understanding Hybrid Governance in Post-Coup Myanmar (Part 1).* Yangon: IRN and Progressive Voice. Accessed January 24, 2026. https://wp.progressivevoicemyanmar.org/wp-content/uploads/2023/07/Understanding-Hybrid-Governance-in-Post-Coup-Myanmar_Part-1-IRN.pdf.[progressivevoicemyanmar]

Chu, Thomas Wai Ki, and Pyi Phyo Kyaw Lynn. 2024. “Biopolitics in Rebel-Controlled Myanmar: Exploring Why the United League of Arakan Supports the Kyaukphyu Special Economic Zone.”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43 (3): 307–330. https://doi.org/10.1177/18681034241256369.[journals.sagepub]

Kalyvas, Stathis N. 2006. *The Logic of Violence in Civil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stimson]

Westad, Odd Arne. 2005.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drmalik.atw]

국가를 초월한 저항, 5년간의 혁명 기록

조 산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MFDMC)

봄혁명의 시작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동시에 '미얀마 봄혁명'이 시작되었다. 아침 뉴스로 쿠데타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해외에 거주하던 미얀마 국민들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국내에서도 전화 통신과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접속이 가능한 순간마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저항의 목소리를 냈다.

다음 날인 2월 2일부터는 냄비를 두드리는 소리가 양곤을 비롯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는 '악마를 마을 밖으로 쫓아낸다'는 미얀마의 오래된 민간 신앙에서 비롯된 상징적 행동으로, 대규모 독재 타도를 향한 저항 운동의 시작이었다.

미얀마 봄혁명은 그렇게 시작되어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혁명은 평화적인 시위로 출발했다. 국민들은 냄비를 두드리며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 총을 들이대는 경찰과 군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장미꽃을 건네며 국민의 편에 서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군부가 자국민 학살을 선택하자, 손에 무기조차 없던 청년들은 길가의 작은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등 저항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걸고 시작한 투쟁이었다.

구세주

처음에는 많은 미얀마 국민이 '구세주'를 기대했다. 자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군부를 국제사회, 특히 UN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시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UN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며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의 발동을 요구했다. 심지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의 대사관 앞에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그 사이 일부 대학생과 지식인들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도움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를 꺾고 싶지 않아, 조용히 무장의 길을 택했다. 2021년 3월 초, 군부의 학살이 본격화되자 일부 대학생들은 소수민족 무장 혁명 단체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국제사회의 불확실한 도움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수많은 미얀마 청년들이 학업과 직장, 가족을 뒤로한 채 목숨을 걸고 무장 저항에 나섰다. 해외에 있는 미얀마 국민들 또한 봄혁명에 큰 기여를 해왔다. 군부의 탄압으로 수천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을 돌보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교민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달 후원금을 보내며 조국의 국민들을 도왔다.

많은 시민들은 1~2년 안에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반면 지식인 사회에서는 5년 이내에 승리하지 못할 경우 투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 시민과 지식인 모두의 목적과 희망은 단 하나, 혁명의 승리였다. 해외 정치학자들의 분석이 어떠하든, 미얀마 국민은 저항의 길을 선택했다.

미얀마 국민의 구세주는 다름 아닌 **미얀마 국민**이었다.

국제정치의 그늘 아래 미얀마의 봄

2020년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CRPH가 구성한 국민통합정부(NUG),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탄생한 시민방위군(PDF). 여기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얀마 군부에 맞서 싸워온 소수민족 무장혁명단체(EAO/ERO)들과의 협력이 더해지면서, 봄혁명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듯 보였다.

세계 군사력 순위 35위를 자랑하던 민 아웅 흘라잉의 미얀마 군부는, 창설된 지 불과 2년 남짓한 시민방위군 (PDF)에게 지상전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1027 작전 이후인 2024년에는 미얀마 영토의 약 70%가량을 소수민족 무장혁명단체들과 PDF가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미얀마 봄혁명의 승리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영향,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혁명은 쇠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봄혁명 초기부터 국민통합정부(NUG)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다뤄 왔다. 미얀마 군부를 수십 년간 지탱해 온 중국 정부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은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왔지만, NUG는 정부 차원에서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적대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 기반을 둔 소수민족 무장혁명단체들(EAO/ERO)에게도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2024년 이후 중국은 주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미얀마 군부와의 화해를 요구하며 장악하고 있던 영토를 다시 군부에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미얀마 봄혁명 과정에서, 미얀마중부 지역을 제외한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들에서 많은 PDF 청년들은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함께 병사역할로 싸웠다. 주요 작전 중 하나였던 1027 작전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얀마 전 지역 수많은 전투들에서 승리함으로 확보된 영토, 이른바 '해방 지역' 가운데 미얀마중부 지역인 사가잉주과 마궤주를 제외하고 국경 지역의 행정과 통치 권한은 대부분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압박으로 MNDAA, TNLA 등 EAO/ERO들이 군부와 휴전에 합의하고 '해방 지역'의 일부를 미얀마 군부에 다시 넘기면서, 이는 PDF 대원들과 시민들에게 큰 슬픔과 분노를 안겨 주었다. 수많은 PDF 청년들의 목숨과 수많은 전쟁 피난민들의 희생이 헛되었다는 인식이 퍼지며, 서로 간의 신뢰도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미얀마 봄혁명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도움 없이 미얀마 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군부에 맞서 싸우며 성과를 만들어 왔으나 그러한 성과가 가시화되자, 외부 세력인 중국의 개입으로 또 다른 거대한 난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해방 지역'에서 혁명 세력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불신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공존과 협력의 해법을 찾을 것인가가 미얀마 봄혁명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국경 밖에서 이어지는 봄

미얀마 군사정권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이른바 '가짜 선거'를 2025년 12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민주연맹(NLD)은 국민의 뜻에 따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민 아웅 흘라잉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구실을 내세워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국회의원들과 민주화 활동가들을 표적으로 삼아 체포와 탄압을 자행했다. 또한 미얀마 국민의 가장 큰 지지를 받아온 국민민주연맹(NLD)을 포함해 총 40개의 정당을 일방적으로 해산시켰다.

이제 민 아웅 흘라잉은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얻는 동시에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각국 정부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에 거주하는 미얀마 디아스포라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직후부터 재정적·조직적 측면에서 봄혁명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여기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의 시각에서, 봄혁명활동의 실태 살펴보고자 한다.
군부의 탄압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과 국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정기적인 구호 물자 지원과 국제사회 대상 정보 확산 활동을 이어왔다.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MFDMC) 역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중 하나다.

쿠데타 이전부터 존재하던 한국 내 미얀마 공동체들과, 봄혁명 이후 지역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 공동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얀마 국내에 구호 물품을 보내왔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면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미얀마 봄혁명의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여러 단체가 연합해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MFDMC)을 결성하게 되었다.

MFDMC는 현재 매달 1,500명 가량의 후원자와 총 7,000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지원을 바탕으로, 조국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 내 활동 단체 가운데에 큰규모로는 '군부독재타도위원회'라는 봄혁명 단체도 있으며, ODC 프로그램을 통해 미얀마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보내고 있다.

두려움 속의 연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한국 시민단체로부터 연대와 실질적인 지원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의 봄혁명 관련 사회적 참여도는, 등록 외국인 수 (2025년 12월 기준 58,000명 이상)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얀마 봄혁명 활동가들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안전 보장' 문제가 지적된다.

봄혁명 이후 국내외의 많은 국민들이 쿠데타 반대와 혁명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미얀마 국내에서 군부의 탄압으로 집회와 시위가 사라지자, 해외 거주 미얀마인들이 그 목소리를 대신 이어갔다. 그러나 군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참여는 점차 줄어들었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소셜미디어에 반대 의견이나 비판 글을 게시하면, 미얀마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협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공포를 조성했다. 또한 해외 거주 주요 활동가들을 특정해 감시와 압박을 가하는 사례도 반복되었다.
혁명이 장기화되면서, 체류국에서 외국인으로 합법적으로 머무는 것 자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다. 여권 발급과 연장 권한을 가진 미얀마 대사관은 군사정권의 통제 아래에 있다.
유학생들은 각종 행정서류에 대해 미얀마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졸업 후 취업이나 거주를 위해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에는 해외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미얀마 국내관할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미얀마 외무부의 인증도장도 필요하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비자 변경이 불가능해져,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미 영주 자격을 취득했거나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체류 자격을 가진 미얀마인들은 민주화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의 체류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년의 투쟁과 꺾이지 않는 희망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미얀마 국내에서는 혁명 세력들 사이에 쌓여온 불신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권력의 분배, 해방 지역의 행정, 외세의 개입에 대한 대응정책, 그리고 혁명 이후의 국가 구상까지, 전장의 승리만큼이나 정치적 성숙과 상호 신뢰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국경 밖에서의 저항 또한 결코 단순하지 않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미얀마 디아스포라와 봄혁명 지지 세력은 재정적 부담 및 감시와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으며, 조용히 살아가야 할지 목소리를 내야 할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는다. 그럼에도 침묵 대신 연대를 택한 자들이 많이 남아있고 혁명을 지탱하고 있다.

봄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

5년이 지나 수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여전히 분명하고 우리의 희망은 꺾이지 않았다.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

한국시민사회의 미얀마 연대를 돌아본다

나현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모임

1.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했던 지지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에 한국 시민사회는 전에 볼 수 없던 규모와 속도로 군부 쿠데타를 비난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전국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어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한지지 성명과 활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전국 106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모임(이하, 미얀마 지지시민모임)을 비롯하여 다양한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한국시민사회는 성명과 기자회견을 넘어서 국회와 정부에도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의 교류 중단 및 무기 수출 제한, 미얀마 이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자격부여 등의 조치를 취했고 국회 역시 여야가 함께 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기업들, 특히 포스코에 대한 큰 압력이 되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해지자 포스코 측은 이례적으로 시민사회와의 면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비롯하여 지난 5년 동안 미얀마 대사관과 무관부 앞에서는 지속적인 항의행동이 이어졌다. 코로나 19 판데믹 기간에는 온라인에서 냄비를

두드리는 행동도 큰 호응을 얻었다 8888항쟁 기념일인 8월 8일을 전후에서는 전국적인 공동행동도 이뤄졌다.

약 5년 동안 미얀마 지지시민모임이 유지된 것도 이례적이고, 미얀마 지지시민모임 외에도 온라인 및 지역에서 꾸준하게 미얀마 공동체와 함께 지지활동은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굳건한 지지는 다른 국가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드러난 한계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대응 국면에서 가장 드러난 한계는 바로 한국기업 문제였다. 포스코에 군부에 대한 배당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돌아보면 사실상 포스코가 철수를 하지 않는 이상 이뤄질 수 없는 요구였다. 막대한 자본이 투여된 사업에 대해서 한국기업의 철수요구를 분명히 내걸지 못한 한계도 있지만 시민들을 설득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해왔다. UN이나 OECD를 통한 접근도 있었지만 당연히 한계가 있었다. 포스코는 가장 관건이었던 미국 정부로부터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히 되자 시민사회의 눈치도 보지 않게 되었다. 2021년에 그 강력했던 미얀마 민주주의지지 분위기에서도 포스코의 미얀마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서명은 만 명을 채우기가 어려웠던 점을 기억한다. 설사 실패했더라도 완강하게 한국시민사회는 포스코를 집중 타격하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전개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 시민사회의 미얀마 연대 활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거치면서 축소되었다. 축소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미얀마 연대 활동가들이 여러 국제연대 활동에 걸쳐있으면서 동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이어지면서 시민사회 전반에서도 외국 보다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EU등이 미얀마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모순을 목도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가치동맹을 내세우며 정작 국내에서는 내란까지 일으키면서 미얀마 군부쿠데타 이후에 벌어진 여러 국제적 분쟁들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접근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분쟁으로 사안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커졌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시민사회가 자체적으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실행하기보다 미얀마 공동체의 요구나 상황에 맞춘 대응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미얀마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 미얀마에서 다른 인근 국가로 확장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 문제(특히 기업의 투자 문제 혹은 미얀마의 연방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로 보다 심화시켜 나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3. 앞으로의 연대 전망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모임은 올해 4월내로 조직 활동에 대해 유지/해산/전환의 선택지를 놓고 숙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 선택에 있어서 미얀마의 상황은 물론이고 모임 내부에 대한 평가과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 지지시민모임의 결정과 상관없이 한국시민사회의 국제연대 활동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을 전망된다.

미얀마 지지시민모임을 비롯하여 지난 5년간의 한국 시민사회 연대 활동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체는 해외주민운동연대이다.

해외주민운동연대는 메솟에 비스킷 생산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한국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의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미얀마 닷봄'을 설립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해외주민운동연대의 고민과 활동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미얀마 닷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
한국과 미얀마의 청년들이 더 많이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캠페인이 시작된 것을 2000년대 초반이라고 본다면 거의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다. 내란 국면에서 확인된 청년세대의 극우/보수화 경향이 세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지만 미얀마는 물론 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청년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청년들이 함께 민주주의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제연대를 다시 묻다 :
미얀마 위기와 아세안 책임

김 형 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1. 미얀마 국민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 아세안이 무엇을 해야하는가 질문에 앞서 미얀마 국민의 필요에 대한 질문과 대응이 필요하다. 2021년 이후 수만 명의 사망자, 약 300만 명 이상의 실향민, 내전의 장기화, 민주주의 붕괴, 민생 파괴로 사실상 국가 시스템의 붕괴했다.
- 최근 25-26선거에 대해 유엔은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아세안은 이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미얀마 국민이 즉각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폭력 중단, 인도주의 접근, 난민 보호이며 중기적으로 정치범 석방, NUG-EAO의 정치 참여, 독립적 대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정부 수립과 과거사 청산일 것이다.

2. 국제사회의 실패

- 국제사회의 미얀마 사태에 대한 대응은 전반적인 실패로 평가된다. 아세안은 내정불간섭원칙 속에 5개 합의 사항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상회의에서 배제하고 최근 총선을 불인증하기로 하는 등 나름 이전과 다른 정책을 취했으나 그 효과와 영향은 미미한 채 5년째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학살이 지속되고 있다.
- 서방국가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자금원의 원천적 차단에는 실패했다. 태국, 싱가포르 등을 우회하거나 한국처럼 기존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활동이 여전히 진행되었다. 실제 제재 이후의 전략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명분으로 진전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형국이다.
- 중국의 경우 인접 국가 지역에서의 불안정을 원치 않는 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내정으로 규정하고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제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EAO와 군부 사이 중재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데 이 자체도 문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과 경제관계 유지는 결과적으로 군부 보호하는 결과를 낳았다. 휴전 중재 당시 NUG 배제한 것은 정치 해결 아닌 현상 유지에 집중했음을 보여준다.
- 유엔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안보리의 역할이 막힌 채 안보리 밖에서의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 국제사회의 '분절된' 대응과 사실상 국제사회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에서 조율이 어려워지면서 군부에게는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3. 아세안의 대응과 책임

- 아세안의 5개항 합의에도 폭력인 지속되고, 대화는 없으며, 정치범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인도주의 접근은 여전히 군부 통제 하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특사는 군부 접촉에 국한되고 있다.
- 아세안 대응 이전과 비교 나름 진전이었으나 정체된 상태로 미얀마에 대한 배제와 불인정은 정통성 부여를 회피했지만 정치적 출구 설계는 불충분하다.
- 아세안의 대응에는 아세안 방식으로 불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합의제에 기반하고 있으나 다수가 권위주의 정권이고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어 기계적 중립에 가깝다. 나아가 회원국 간 입장 차이는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한 합의를 방해하고 있다.

- 특사 제도는 의장국 임기가 1년단위 순환하면서 권한과 접근이 매우 제한적으로 상징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아세안이 할 수 있었던 조치들이 존재한다. 총선 불인증을 발표했으나 역으로 특정 조건 충족을 인정 조건으로 제시했다면 군부의 선택을 압박할 수 있었을 것이다. 25년 말레이시아에 이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이해관계자 관여'를 시도했으나 특사 임무(mandate)에 NUG·EAO 접촉 권한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군부의 접촉 독점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 인도주의 지원도 군부 허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다. 군부 우회 경로에 대한 시도가 없었으며 정치 변화 없는 대시 인도지원 부분적 허용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 근본적으로 5PC 채택했으나 불이행 시 불이익 없었다는 것은 군부를 압박할 카드 부재로 작용했다. 정상회의 배제는 "초대 거부"일 뿐, 제재 아니었고 군부로서는 특별히 손해를 볼 것이 없었다.
- 나아가 아세안의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아세안 공동체의 축인 정치안보 공동체의 정신(인간 존엄보호), 아세안 헌장의 "민주주의·법치·인권 증진"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아세안 공동체는 정부 공동체가 아닌 시민 국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국제연대 재구축 필요성

- 현재 압박(서방 제재)과 출구(아세안 대화)가 분리된 상태이며 군부는 중·러 지원으로 제재 견디고 있다. 아세안 대화는 군부에게 시간벌기에 활용되는 형국이다.
- 서방의 보다 강경한 대응 아세안의 유연한 대응 사이에서 중국의 중재 및 유엔의 보증역할 등이 시간과 조건과 연동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폭력 중단과 검증 허용을 전제로 일부 제재가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이 중심이 된 휴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중국은 건설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엔 차원에서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또는 아세안과 연계한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수 있다.
- 다음 단계로는 군부가 정치범 석방과 대화에 나설 경우 서방의 추가적인 제재 완화 및 아세안의 대화 플랫폼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중국의 경제협력 재개 및 유엔의 ICRC접근 검증을 검토할 수 있다.
- 현 상황에서는 미얀마 군부가 내전 및 폭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를 중단하는 것보다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인식하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재 우회를 차단, 제트 연료 및 무기 유입 차단, 군비 기업 수익원에 대한 추가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얀마 군부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인 싱가포르, 태국, 중국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한국 정부의 대응과 역할

- 한국 정부는 유엔 결의 찬성, 일부 인도주의 지원를 이행했지만 독자 제재와 NUG접촉이 부재했고 기존 진출 기업 활동 유지(포스코인터내셔널) 전반적으로 국제사회 여론에 편승하는 눈치보기식 대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아세안을 존중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아세안은 오히려 대화 상대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지지와 지원은 한국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여건이다. 아울러 미중 갈등, 국제기구의 한계 심화, 아세안의 무력화 사이에서 중견국, 민주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 군부 관련 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 NUG비공식 접촉, 태국과 방글라데시 국경 인근 인도주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한-아세안회의 등 아세안관련 정상회의에서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대해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 실용외교, 국익우선이라는 기조 속에서 소극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추동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연대 또한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외교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세안의 신뢰를 얻고 강대국 리더십 부재 속에 중견국의 역할 발휘와 연계된다.

5. 국제사회 대응

- 미얀마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폭력 중단, 인도주의접근, 정치범 석방, 대화 재개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이다.
- 국제사회의 대응과 연대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아닌 이러한 미얀마 국민의 요청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